

나라경제

2000.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정**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책** 투자신탁산업의 투명성 제고
- 해**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
- 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이 달의 초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과제

나라경제

2000년 8월호
통권 제117호



2000년 7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 4 권두칼럼 구조조정으로 21세기 선진한국을/이규성 · 前 재정경제부장관
- 6 만만금 중소기업을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VS 배광선 소장

특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12 구조조정 마무리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한성택 · 재정경제부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16 - 거시경제 부문/이병완 · 영남대학교
- 21 - 금융 · 기업 구조조정 부문/김정식 · 연세대학교
- 25 - 지식기반경제 부문/강용중 · 현대경제연구원
- 29 - 사회복지 부문/김원식 · 건국대학교
- 33 - 지역개발 · 국토계획 부문/허재완 · 중앙대학교
- 38 - 남북한 경제협력 부문/김연철 · 삼성경제연구소
- 42 - 산업 및 통상 부문/유재원 · 건국대학교

이 달의 초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과제

- 48 필수약품 확보가 선결과제/안효환 · 보건복지부
- 52 시민단체의 최종안 수용해야/이강원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55 의료계 · 약계 상호간 불신제거가 관건/신현창 · 대한약사회

- 58 **경제수상** 유전자 지도와 인간의 운명/최석식 · 과학기술부
60 IMF가 노동시장에 남긴 것/정병석 · 노동부
63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윤근영 · 연합뉴스 기자

경제 정책해설

- 68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반장식 · 기획예산처
72 투자신탁산업의 투명성 제고 - 채권시기평가제의 시행
/김재찬 · 금융감독원
76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전성배 · 정보통신부
81 아·태 지역 관광의 도전과 기회
- 제1회 APEC 관광장관회의 개최/조현재 · 문화관광부
85 수해방지 위한 종합대책 마련/김명국 · 건설교통부
88 수산물 수출 진흥으로 무역수지 흑자 실현/박종국 · 해양수산부
93 인터넷 情報家電 산업 육성/임종태 · 정보통신부
96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적극 추진/이신재 · 노동부
- 98 **기업정보**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전망(I)/주순식 · 공정거래위원회
10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조시용 · 중소기업청
105 **공공부문 경영혁신** "영상으로 경복이 좁아졌습니다"/김장주 · 경상북도
109 **논단**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현황과 과제/박강호 · 외교통상부
113 **경제동향** 일본경제의 회복조짐과 향후 전망/이홍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7 **한국경제에 관한 외신보도 동향**
124 **주요 경제지표**



만남 :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VS 배광선 소장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이진순 · KDI 원장

편집인/이철환 · 재정경제부 경제정보기획단 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이가복 · 경제정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이현주 · 통상정보지원팀장
과학기술부/이만기 · 정책총괄과장
농 립 부/조규담 · 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진 홍 ·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정경원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이계용 · 기획예산담당관
환 경 부/노부호 · 정책총괄과장
노 동 부/남석현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이재영 ·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김성진 · 기획예산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주순식 · 총괄정책과장
기획예산처/반장식 · 예산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박환근 · 기획과장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백우진 · 재정경제부 경제정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원동업

업무/안의일

표지 디자인/에 진

일러스트/오진목

인쇄/유성사

나라경제 · 2000년 8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1권 제8호
(통권 제117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0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0-650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 : nara@kdiux.kdi.re.kr

관리인: k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4~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7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조조정으로 21세기 선진한국을

이 규 성

前 재정경제부장관 ·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수
(ksl@kgsm.kaist.ac.kr)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세계경제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시장의 세계화, 거래의 사이버화 그리고 생산의 지식화로 집약되는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미국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80년대에 피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90년대에는 혁신



을 선도함으로써 1991년부터 112개월째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경제의 대변혁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비용·저효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에도, 구조조정을 통해 그 근본 원인을 시정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그저 거시경제면에서 고성장정책을 추구하다가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기업·금융·정부·노동의 4대 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재무구조도 튼튼히 하고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아 왔다. 금융부실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건실한 은행(clean & sound bank)을 만들어 왔다.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였으며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추진에 따라 우리는 다른 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9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환율은 1,1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98년 6.7%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99년에는 10.7%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

되었으며 2000년에도 8%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8년의 7.5% 상승에서 99년에는 0.8% 상승으로 안정되었으며 2000년에도 2.5% 정도의 상승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눈물과 땀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기를 물리치고자 하는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 IMF와 우방선진국을 위시한 국제금융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이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의

근원은 제1차 금융구조조정 이후 대우문제가 발생하여 막대한 부실채권이 추가된 데 있다. 여기에는 은행들은 짝짓기 등 제2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자금운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투신사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이 위축되자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의 차환발행까지 어려워졌다. 일부기업의 위기설은 기업신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확산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호텔 파업, 의약분업 분쟁, 은행 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의 분출은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우려감을 야기시켰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21세기에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금융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자금공급경로 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대우 관련 부실채권을 하루속히 정리해야 한다.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work-out) 중인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 시장에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말고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실을 정리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부분보장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제 구조조정이 미흡한 금융기관에는 누구도 예금하러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면 당해 금융기관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는 예금의 대이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시장의 신뢰가 약화된 기업들이 시장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않으면 이제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퇴출될 수밖에 없다. 만약 대기업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언제까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 하루바삐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와 과제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경제주체들은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자기만족(complacency)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반영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격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달아서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부가 개혁을 술선수범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실천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만족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틀은 시장규율의 확립과 경쟁의 촉진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협조적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틀은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공정한 규칙의 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첫째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둘째로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로 이익집단 간 교섭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억지와 한풀이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넷째로 일단 정해진 규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확립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었던 지난날 구조개혁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지도 모른다. ■

중소기업을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담 : 배광선/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센터 소장

• 때 : 2000년 7월 14일 • 곳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실



“

중소기업 문제는 단기효과 위주의
대중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별 체질
개선과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정책적
관심을 좀더 쏟아야 합니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답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인식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 먼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외의 발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취임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업의 창의성·유연성·역동성·혁신성이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성·기동력 등 특유의 장점을 갖는 중소기업이 혁신성을 갖출 경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항상 배우고

확인하면서 미력이나마 우리 중소기업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중소기업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신임 위원장의 중소기업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대기업의 존적인 성장체질이 고착화되는 등 ‘활력 있는 다수’로서의 적극적이고 자생적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과거의 정책오류를 바

로잡고, 나아가 중소기업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제도약과 선진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중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양적으로나 제도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하고 강력한 수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는 시책



간의 연계와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단기효과 위주의 대중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별 체질 개선과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정책적 관심을 좀 더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의 중기특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기특위의 향후 운영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중기특위는 발족 2년여밖에 안됐지만 전임 위원장님들의 높은 경륜과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중기특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기특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가 크고 아직도 해야

을 통한 실천력 강화 둘째,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 및 체감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셋째, 정책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지원재원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신규 정책수요의 적극 발굴 등을 업무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시책별 평가분과위를 구성·운영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애로 처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마련, 정책자금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정부의 벤처정책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가 벤처기업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중기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첫째, 정책 심의·조정기능의 내실화와 함께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3년 동안 7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는 등 단기간에 벤처붐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일구어낸 벤처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단기간의 급성장에 따른 조정국면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벤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되, 민간부문을 驅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장단계별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벤처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의 지방화 등 벤처기업 저변의 확대·균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27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대회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세계 60여개 국에서 1천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소기업의 발전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기특위가 중심이 되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기특위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 그동안 부분적인 남북 경제 교류 단계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은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너도나도식의 경쟁적인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프로젝트 발굴 및 선정, 협력방식 등에 관해 중소기업계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중기특위의 역할이 요구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지역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하시면서 보고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 중기특위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인식은 “중소기업의 문

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답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된 ‘지역중소기업인대회’는 지역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함과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벤처산업 발전전략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소개하고 혁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에 강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나타내면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경기상승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지역별로 다소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불안해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역대회에서 수렴된 정책과제를 종합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대담자 배광선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센터 소장

— 중기특위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조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먼저, 중소기업 문제는 다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중소특위가 수행하는 심의·조정·평가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특위는 상설조직이 없이 공무원 8명을 파견받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할 일은 많고 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중기특위의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조조정 마무리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최

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연초에 비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 및 교역량 증가 등에 따라 세계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국내경제성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산유국의 감산합의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3~4달러 수준 높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금년도 거시경제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을 구성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신축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상반기중에는 11% 수준의 성장, 1.5% 내외의 물가안정, 3%대의 실업률 등 당초 예상보다 훨씬 건실한 경제모습을 실현하였으나 아직 금융·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 유가·임금·공공요금 등 코스트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sthan11@mofe.go.kr)

푸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 압력, 그리고 교역조건 악화와 경기상승세 둔화 현상이 경기침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하반기 중 현재화되어 안정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거시 및 미시정책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간 8%대 성장률 이룰 전망

2000년 상반기 성장률은 투자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1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6%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간 성장률은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의 성장률 둔화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유통 등 내수의 회복이 아직 더딤에도 불구하고 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한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하고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컴퓨터 등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6%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상승세의 지속과 실업대책

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연간 실업률은 4%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5월 현재 실업률은 9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감소(3.7%, 83만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활발한 창업활동과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 등으로 3.8% 수준을 유지하여 연간으로 4%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금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1.5%에서 안정되었고 하반기중 소비자물가는 2~3% 상승이 예상되어 연평균으로는 2.5%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중에는 국제유가 불안으로 에너지가격과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나 경기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며,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혁신 등의 요인으로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호조 등으로 13%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연간으로는 18% 내외로 증가하고, 수입은 하반기중 경기상승세 둔화에 따라 24% 수준 증가하여 연간 전체로는 34%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무역수지 악화

정부는 안정기조 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남북 및 대외 경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의 주요인이 된 교역조건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격 회복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 100~12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월중 경상수지는 24억2천만달러 흑자에 그쳤으나, 6월의 무역수지 호조로 상반기중 경상수지는 45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하반기에도 5~6월의 흑자추세가 지속되어 60~8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9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도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여 자본자유화에 따라 단기자본이 급속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기조 속 지속성장기반 확충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3조원 보다 1~3조원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0~2.5% 수준으로 운용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화 및 국제물량의 신축적 조정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바탕으

로 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는 등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를 촉진하며, 대우관련 불확실성 등 시장에 드러난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하여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안정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관련인프라를 지원하여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부실 벤처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등록시장의 등록·퇴출·공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용하는 등 감독기

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앞서 마련(5.23)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활동 강화, 플랜트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추가적인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중복과다투자를 방지하여 나갈 것이다. 특히 에너지, 물 및 음식쓰레기의 절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 수요 목표관리제의 도입, 중수도 설치 의무화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을 통해 물 절약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금년말 해외여행경비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기업의 해외증권 취득을 자유화하는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 방지를 위해 원화자금조달 거래에 대한 제한근거를 유지하고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시장교란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은행의 잠재부실 공표와 클린뱅크(Clean Bank) 선언(6월

말)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고 7월 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하는 등 은행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클린화를 마무리하는 등 투신사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시가평가제를 차질없이 시행(7.1)하고 신규자금 유입을 위해 비과세상품 등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3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 및 철저한 감리(금년 8월중 공시예정)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M&A전용펀드를 허용하

는 등 M&A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중 개시된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8월 완결 예정), 소수채권자·주주와의 개별협상도 본격화할 것이다.

노동부문은,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2단계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하반기중 설치·운용하고, 포철·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하며, 한중·한통·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계획대로 정리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3개년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 분야 등의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선진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보화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미 마련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 등을 통해 교육비 감축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10월 시행)하고, 의료보험 관리조직을 통합(7.1)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를 3~6개월간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국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상반기 성장률이 11%에 이르고 하반기에는 6%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간 성장률은 8%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실업률은 4%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5%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100~200억달러 수준에 이르러 외환보유고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조기에 확정·시행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준농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하반기중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남북 및 대외 경제협력의 추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 공동선언' 중 경제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ASEM 정상회담(금년 10월)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ASEAN+3 정상회담(1999.

11)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우리 경제는 금년중

안정성장을 이룩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진일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부실이 해소되고 투명성이 제고되어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의 정책효과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거시경제 부문

이 글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필자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거시경제정책은 정책기조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지가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제들을 선정해 나열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비중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제시된 정책추진방안들은 어차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방향들은 추진과정에서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 어느 한쪽의 희생이 있어야 다른 한쪽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된 세부실행계획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기보다 정책방향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 중에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병완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둘째, 지금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만 3년에 근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정책의 실패가 누적됨으로써 필연적인 귀결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실패를 철저히 거울삼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가 또 다시 누적돼 위기가 재발하면서 선진국 진입은 번번이 좌절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제금융기구의 국제금융과 단기외채 만기 연장 등 응급처치에 주력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은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금융

위기 이전의 패러다임을 시장중심적(market-based)인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개조하는 데 진력해 왔다. 이제는 IMF의 타율적인 정책간섭이 사실상 종결된 시점이며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역점 둘 때

누적된 거시정책의 실패요인이 무엇이며 중장기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거론하기 전에 잠시 97년의 외환위기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돌이켜 보면, 97년의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세 가지 유형이 거의 동시에 서로 맞물려 진행되고 있었다. 즉, 이미 97년 초부터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은행위기 상황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수급이 급격히 악화돼 단기 외채 상환압력에 대응치 못하는

외채위기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통화위기(즉,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현재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정리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적자

금을 동원해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했지만 V자형 회복과정에서 가려지고 잠복되었던 기업부실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은행권의 추가부실 처리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외채위기의 급박성은 없어진 상태지만 그렇다고 원금이 아직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는 늘어나는 쪽보다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또한 원화가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25% 정도 절하된 상태이고 국가신인도 역시 금융위기 이전수준까지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한 것도 사실이다.

올해의 경우 성장률은 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연간 4%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5% 내외일 것으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건실하게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되 수출채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외환위기는 이러한 거시정책과제의
실패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 추정되며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900억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경우 이러한 거시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느라 어쩔 수 없이 최근 2년 동안 GDP 대비 4%대(통합재정수지 기준)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의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3조원보다 1~3조 추가 감축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GDP 대비 2~2.5% 수준에서 운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성장률 지표에 대한 관찰 통해 주요 거시정책과제 도출 가능

외관상 양호해 보이는 이들 거시지표들 중에서 특히 성장률 지표에 주목해 보자. 연간 또는 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사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갖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들을 거론하다 보면 우리 경제의 주

요 거시정책과제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첫째, 경기진폭이 심한 기간 동안에는 분기 또는 연간 성장률이 기술적 급반등 또는 기술적 급반락을 보이게 되므로 2~3년 평균치를 가지고 경기흐름

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99년의 10.7% 성장률을 과거 호경기 때의 10%대 성장률이 갖는 의미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98년의 -6.7% 성장률과 99년의 10.7% 성장률 평균치인 2%를 가지고 이 두 해의 경기국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수요증가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구하는 경우 이 점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9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략 7% 내외에서 조금씩 하락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보다 2% 이상 낮은 4~5%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한국은행의 최근자료 참조). 이 때 2000년 1/4분기의 성장률 12.8%를 잠재성장률 4~5%와 비교하면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 압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표>에서 보듯 최근 3

년의 평균성장률이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총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현재로선 우려할 수준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실질GDP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지표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무역손실 또는 손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실질GDP 증감률 즉, 경제성장률은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소득 변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만큼 경제성장의 실상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94~96년의 평균성장률은 8%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1998~2000년의 평균성장률은 약 4% 내외로 추정되므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은 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를 감안한 실질GNI 증감률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추락세는 이보다 훨씬 크다. 즉, 최근 3년의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은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해서 94~96년의 평균성장률 7.1%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것

이다. 우리 경제를 하나의 장사꾼에 비유한다면 비싸게 사서(수입 물가 상승) 헐값에 내다 파는(수출물가 하락) 장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남지만(성장률은 높지만) 뒤로는 밀지는(실질소득은 추락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셋째, 경제성장률 수치는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장률 수치 그 자체도 중요한 기초여건변수(fundamental)이긴 하지만 성장의 질적인 내용이 어떠한가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장률 수치만으로는 물가안정이 유지되는 상태의 성장인지, 건실한 투자가 뒷받침된 미래지향적 성장인지, 재정건전성이 유지된 상태의 성장인지 등을 알 수 없다.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는 단기 부양책이 흔히 경기회복을 오히려 더디게 만들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내수위주의 성장(가령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서비스산업 등의 활황세에 의존한 성장)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출경기가 가라앉을 경우 높은 성

장을 달성은 후유증과 함께 곧 침체로 반전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경기진폭을 크게 만들고 만다.

이는 물론 원자재와 부품 및 생산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총생산에서 수출이 3~4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이때 대외채무와 국내신용 팽창으로 뒷받침된 소비와 투자 부분이 크면 클수록 경착륙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커진다. 대외채무와 국내신용 총량을 감시·감독하면서 적절히 통제하는 일은 정책당국의 몫이지만 여신심사, 신용평가, 투자정보시장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해 시장규율이 잘 작동된다면 정책당국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될 것이다. 시장규율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는 물론 공시제도와 회계관행 등의 건전성 및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 등이다.

단기적 성과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 행길 때

성장률 지표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

〈표〉 교역조건 변화와 실질GDP, 실질GNI의 백분율 변화 추이(전년 대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교역조건	95.5	98.7	100.0	90.5	88.1	84.2	82.4	-
실질GDP 증감률	5.5	8.3	8.9	6.8	5.0	-6.7	10.7	8~9%
		3년 평균 = 8%				3년 평균 = 약 4%		
실질GNI 증감률	5.7	8.4	8.1	4.8	2.1	-8.8	8.9	5.5% 내외

주 : 2000년의 실질GNI 증감률은 추정치임.

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건설하게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되 수출채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준다. 외환위기는 이러한 거시정책과제의 실패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또한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는 경기안정화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위기와 같은 경착륙과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과 같은 경기과열 경험은, 지나친 침체는 엄청난 사회적 정리·조정비용과 함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지나친 과열은 계층간의 갈등, 경제정의 실종, 비생산적 투기활동 만연 등의 문제를 초래해 오랜 후유증을 남기게 됨을 일깨워 준 바 있다.

또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속한 회복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경제행위의 동기를 비생산적이거나 투기적인 행위 또는 지대추구적인 행위에 몰두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고속 불안정성장'보다 '저속 안정성장'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고, 이는 구조조정 마무리 작업과 맞물려 불가피하며 하반기 거시정책의 큰 방향도 이러한 관점이 투영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다루는 데 있어 외채문제와 국가신인도 문제를 고려할 때 저속성장과 저수입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보다 무게가 실려야 안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다루는 데 있어 외채 문제와 국가신인도 문제를 고려할 때 저속성장과 저수입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보다 무게가 실려야 안정성장(sustainable growth)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기안정화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부문별로 자생적인 경기대응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하반기 동안 4대 부문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철저히 마무리해 부실을 모두 털어내고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을 조기에 정착시켜야만 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시장규율을 제대로 갖추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 연준의 맥도너 총재가 APEC 서울 포럼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시장규율은 감독당국 못지 않은 강력한 시장감독자이며 건설한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의

위기대응력(crisis resilience)을 높여 준다.

또한 시장중심적인 경제환경하에서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선제적인(preemptive)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물가상승의 고삐가

풀리고 나서야 뒤늦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주식과 채권시장에 투매현상과 같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압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논란을 빚더라도 중앙은행은 과감한 선제적 금리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물가안정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금리인상을 시장에 무리없이 수용시켜 과잉반응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충수요를 적절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속성장보다 더 소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고속 안정성장'이겠지만 이는 미국의 신경제 경험에서 보듯 오랜 저속성장과 구조조정의 결과물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고속 안정성장 궤도를 타려면 우선 미국과 일본처럼 소재와 자본재를 수입대체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

다. 외부적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 내수중심의 성장을 하더라도 외환위기 걱정 없는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낮은 외화가득률을 보이는 가공무역형태의 수출입구조를 탈피해 자본재 수출국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선진국의 4~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의 핵심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요컨대 현재의 R&D 투자규모와 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술개발력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장기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단기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들과 단기성 부양과제들에 밀려왔고 5년의 대통령 임기, 잦은 경제팀 교체가 그나마 일관성 있는 추진을 약화시켜 왔다고 생각된다. 10년 이상의 시야를 갖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결국 더 많은 수출이 더 많은 수입을 부르는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수출의 재산성을 맞추어 나가는 것과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숙명적인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 개선과 함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선 수입물가 상승요인의 경

우 환율을 제외하면 모두 외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출물가하락 요인에 보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중 장기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역조건 개선을 수출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서 찾아야 엔화 움직임과 유가 움직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뒤틀리면서 전전긍긍하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반기 거시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기과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보다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

〈수입물가 상승 요인〉

- 공급 요인 : 공급 교란
- 수요 요인 : 세계 경기 상승
- 환율 요인 : 통화가치 하락

〈수출여건 결정 요인 (수출물가 하락 요인)〉

- 공급측면 요인(비용요인)
 - 국내 요인
 - 기업내적 요인: 경영효율성, 기술력
 - 기업외적 요인: 임금, 물가, 금리, 수출금융, SOC, 기술개발 인프라 등
 - 국외 요인 (외생적 충격요인) : 환율, 유가, 국제금리
- 수요측면 요인 : 국제경기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금융 · 기업 구조조정 부문

최

근 들어 몇몇 대기업의 부실문제가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지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같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금융과 기업부문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기업의 추가부실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불러

이들 구조조정 계획을 요약해 보면, 먼저 금융부문의 경우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은행권과 투신의 잠재부실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추가 자본확충을 하게 함으로써 은행과 투신을 클린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imjs@yonsei.ac.kr)

는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여타금융기관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현재의 금융불안이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확실히 밝혀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현재 누가 구조조정의 주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주도로 하고 여타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점과 은행 구조조정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나 자발적인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와 겸업화로 나아간다는 계획 역시 우리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금융불안이 해소되는 않으며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먼저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은행이나 투신권의 부실 혹은 잠재부실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기업의 추가부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을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자금차입이나 방

만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업의 부실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일부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다고 할 수

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기업이 존재하여 그룹 전체를 부실화시키고 있고, 또한 그동안 실업을 우려하여 협조융자나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 오던 기업 역시 다시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추가적인 기업의 부실 규모에 대하여 투자자 모두가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금융시장은 불안한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한정되어야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밝히는 것만으로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소시키자면 기업의 부실을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그룹내의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각 그룹내의 한계기업들은 건전한 모기업마저도 부실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자금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개입은 결국 금융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한 부실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막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서 운영되도록 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부실은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역시 대형화하는 것만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그동안 대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도 대형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이들 은행들은 다시 대형 부실은행이 된 것을 보아도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물론 대형화로 인원감축 등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 조치와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는 채 대형화로 묶어 놓는다고 경쟁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은, 부실화된 은행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또 다른 대형 부실은행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구조조정의 경우는 그래도 정부라는 주체가 있어서 비록 노조와

의 마찰이 있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민간 및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합병 등의 구조조정에 있어 그 주체가 불명확하고 노조 등 이익집단의 역할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이들 은행의 건전성 규제 등 감독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한 조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공적자금의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금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개입은 결국 금융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한 부실을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다시 막아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므로 향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자금경색이 나타나자 정부는 10조원의 채권안정기금을 은행들로부터 강제로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으로 산

채권이 부실화되면 이는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앞으로 만기 도래할 회사채를 이렇게 계속 정부가 나서서 막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산업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금시장은 시장 원리에 맡겨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 때문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다음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보면, 정부는 결합재무제표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성실한 재무제표와 후진적인 회계제도가 우리 기업의 부실을 은폐하여 왔고 기업의 무모한 확장을 도와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제도의 선진화와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강화가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결합재무제표의 강화로 그룹내 기업의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건전화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이러한 조치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

상되고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의 강화에 있고 이를 통한 수익성의 증대에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재무제표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무구조의 건전화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수익성의 증대보다는 증권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1차 기업구조조정시 우리는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부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과도한 실업을 우려하여 구조조정 도중에 경기를 부양시켰기 때문이다. 경기가 부양되자 주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구조조정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열기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다시 계열기업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즉, 우리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수익성 제고에 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부채비율을 낮추기보다는 증시를 부양시켜 이를 달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비록 그동안 경기는 부양되고 실업은 줄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아직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많은 한계기업이 그룹내에 남아있으며 이들 한계기업이 여타 건전한 기업도 부실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행한 회계제도 개선이나 결합재무제표의 구성 등 미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환경조정이 필요하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되어야 만이 기업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부양되어야 만이 구조조정의 비용이 적게 들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은 기업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로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경기 위축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외환위기 이전에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기업구조조정이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기 도 부양되었으니 경기가 연착륙되어도 그 비용이 과거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사용해 온 미시적 조치 이외에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거시경제적 여건이 갑

자기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우리는 경기를 위축시켜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다가 급격히 위축된 경기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기연착륙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향후 원만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기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저금리정책에서 점차 금리를 높이면서 경기의 연착륙을 시도하게 하여 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룹내의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여 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이 기회에 유도하여야 한다. 그동안 기업집단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아서 지금의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차례 업종전문화를 시도하였으나 기업집단의 반발과 실업을 우려한 경기 재부양정책으로 중단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의 구조조정도 많은 휴유증을 남겼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업종전문화를

기업의 추가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을 막으려면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내수를 부양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는 경기를 연착륙시켜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하기는 어렵다.

현재 경제팀은 결합채무제표를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줄이려고 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그룹내의 비효율적인 기업을 기업 스스로 퇴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경기가 연착륙될 때 기업 스스로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업종전문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도 과거 실업률이 높아서 큰 사회적 비용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구체해 주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아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업의 부실에 있고 기업의 부실은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은 늘어나도 그 가득률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내수를 부양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보다는 경기를 연착륙시켜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업부실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우리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안개도 걷힐 것이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지식기반경제 부문



리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 있다. 전문용어로 알려져 있던 디지털·인터넷·게놈(Genome) 등이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잡고, 닷컴 기업이나 e-비즈니스 하는 새로운 기업과 사업 모델에 친숙해진 지도 오래다. 이것을 디지털경제라 부르든 신경제라 하든 혹은 지식기반경제라고 표현하든, 경제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디지털경제, 신경제 그리고 지식기반경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과 대중화가 진전되었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진전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긴 하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들이 일반 대중·기업·정부 속으로 확산되면서 소비행위, 생산활동, 판매활동, 정보 유



강용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lucas@mail.hri.co.kr)

통방식, 기업의 성장방식 등을 바꾸어 나갔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디지털 기술을 상징하는 쌍두마차라는 점에서 이들이 변화시킨 경제 시스템을 '디지털경제'라고 부른다. 요컨대 디지털 기술이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게 된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신경제는 디지털경제의 또 다른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경제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 정보통신 산업의 급성장 등에 힘입어 사상 유례 없는 장기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심각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가르쳐 왔던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동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경제 즉 신경제로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는 디지털경제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기반경제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지식이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발명과 발견,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자본주의는 언제나 지식기반경제였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식기반경제로 지목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지식의 유통과 축적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 곧 디지털 기술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은 지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Genome)도

컴퓨터가 없었다면 해독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경제 · 신경제 · 지식기반경제는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각각 시각과 강조점을 달리해서 볼 뿐이다. 다만 디지털경제는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혹은 하드웨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디지털경제가 원만하게 정착된다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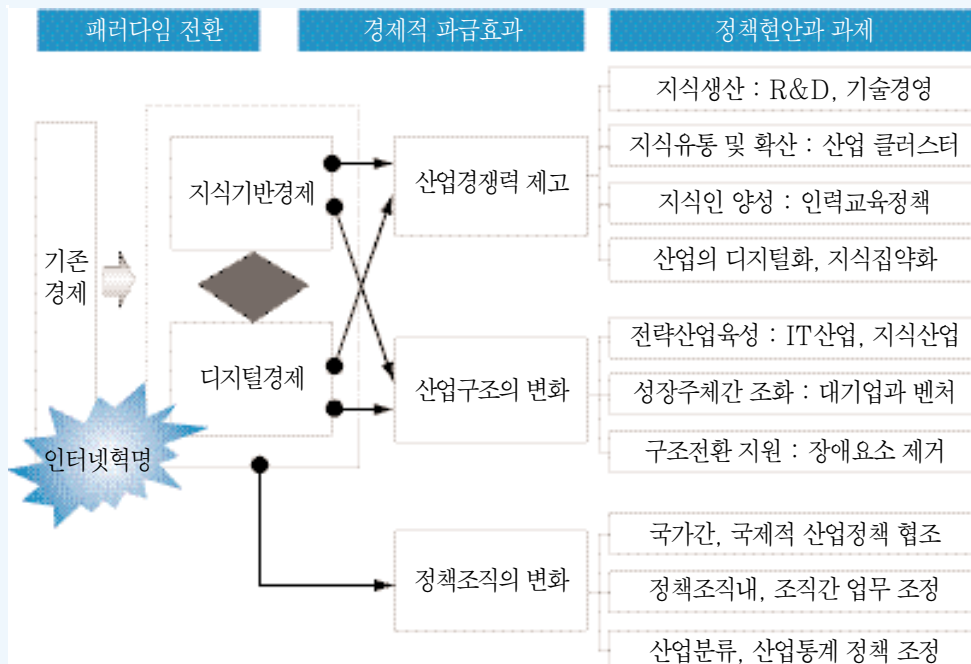
새로운 미래형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새로운 정책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지원, 지식의 생산체계 재구축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과 자본과 같은 양적 요소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던 경제가 지식과 기술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 원천

그렇다면 '디지털'과 '지식'을 키워드로 삼는 패러다임 이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압축적으로 말한다면,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으로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을 확보하는 셈이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성장의 원천이 달라짐에 따라 노동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그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요 정책과제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한층 성숙된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기반의 확충과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검토

우선적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을 필두로 시작된 디지털화의 흐름이 새로운 경쟁력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 까닭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e-비즈니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도 디지털기기의 활용에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B2B·B2C·B2G·B2E 등 다양한 거래 모델이 개발되고 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e-비즈니스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제거하는 것과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건설·철강·조선·화학 등 업종별 전자상거래(CALS)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전자 업계가 업체

및 부품 업체의 협력을 통해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의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의 구축은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지식의 생산체제를 재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과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기적·집중적 투자가 불가피한 R&D 정책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력 수급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인력 양성의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의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중요한 산업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80년대의 쌍둥이 적자가 중요한 국가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식의 유통 및 확산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 지식의 유통 시스템으로서 디지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기업정보화·산업정보화·가정정보화·국가정보화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식 확산 시스템의 하나로서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 성공 사례 이후, 산업 클러스

터는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 등을 구비하고 정책적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해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하의 주력산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철강·반도체·석유화학이 소재산업으로서 중화학 공업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의 인프라 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을 주요 생산요소로 삼는 기술집약적 산업, 소프트 산업, 문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지식산업은 기존의 전통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

을 위해 성장주체간 협력과 조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호 협력과 제휴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소(벤처)기업의 협력과 네트

워크 형성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시키는 역할도 적극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온라인(on-line) 기업과 기존의 전통산업에 해당하는 오프라인(off-line)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주문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상품의 배송은 마차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디지털경제는 심각한 경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기업 혹은 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셋째,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도구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전통적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기존의 제도적 장치가 신성장 산업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는 다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마

B2B · B2C · B2G · B2E 등 다양한 거래모델이 개발되어 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금융 ·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 건설 · 철강 · 조선 · 화학 등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 전통적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법과 제도가 신성장산업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찰 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예를 들어 향후 성장산업으로 예상되는 통신산업, 생명공학,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 등의 업종에는 가격 규제,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산업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까지 각종 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 금융 · 세제상 지원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패러다임도 변화해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책 패러다임도 변화시킨다.

먼저, 국가간 · 국제적 정책 제휴와 협조가 훨씬 중요해진다. 디지털경제에서는 네트워크화로 인해 일국 단위의 산업정책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 더욱더 줄어든다. 따라서 사안별 · 업종별로 특정 국가간 제휴와 협력을 통해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책조직내 그리고 정책조직간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다수 부처에 중복되어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팀을 꾸려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위

한 정보 시스템의 재구축도 요구된다.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보다 세분류해야 하는 산업군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산업 분류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속도가 중요시되는 디지털경제하에서는 시차가 큰 통계지표로는 정책을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유통시킬 수 있는 정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길이다.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내실있게 도달하느냐이다. 우리 경제가 이룩한 과거의 성공사례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형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져 있는 셈이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사회복지 부문



민정부」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여 왔다.

2000년 하반기의 정책방향은 첫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 둘째, 교육재정의 확보와 학부모 부담의 완화 셋째,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의 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타법령이나 제도와 마찰·중복 없는 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 및 의약분업의 시행,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가 주요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onshik@kku.ac.kr)

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93만원)를 보장하며 이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전국의 저소득층을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실사조사하고 이들의 상태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전환된 것으로서 일단 수급

되면 계속 수급되는 경향이 있다. 제도 전환에 따른 급여수급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변경과정에서도 급여수급의 변경상황에 대한 새 대상자의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여부를 관찰하는 근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가능한 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근로조사와 중복이 되어 근로능력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타법령과의 경쟁적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각출료를 납부하여 얻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수혜자는 자신의 급여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는 자칫 복지제도의 목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사회보험제도와 중복성을 피하고 각각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수준은 가족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금을 뺀 금액이 된다. 이때 가구소득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타제도와의 자료공유의 필요성이 있다.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나 혹은 고용보험의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고용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들 제도는 기업별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관리체계(필자註: 기업별 징수시 개인별 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를 부과한다면 근로조사나 가구의 소득파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관리조직의 통합은 과거 조합별 보험료율을 통일하고 총액기준으로 보험료가 통일됨으로써 소득기준 형평성의 제고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복지, 교육 그리고 환경정책은 직접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체적 분야로 사회보험재정을 포함한 정부예산의 40%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효율적 관리체계가 없이 지출에 급급하다 보면 생산부문의 자금을 잠식하고 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2000년도 하반기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의가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가에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는 전국적으로 단일 공단에서 단일의 임금체계가 확립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자칫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수가체계의 현실화 및 자율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최소한 지역별 차이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의료·산재보험 등의 효율적 운용과 보완 필요

의약분업은 직접적으로 의료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아울러 의료보험의 진료비 억제를 위한 것도 하나의 목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진료비 억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설령 의약분업이 정착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

하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전제로서 이미 진찰료 등 진료비 현실화를 공언하였기 때문에 진료비를 억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 낮은 수가체계는 보험의 진료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료부조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의료수혜가 편중되어 있고 고소득층의 의료활용이 많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의 수혜를 늘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 혹은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적용확대는 산재보험의 전국민 혜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50인 이상 사업주의 적용도 확대하여야 한다. 과거 급여가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던 제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용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제는 급여의 상하한이 설정되어 급여의 과다 지출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었다고 본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비록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산재감독이 어려운 직장이다. 따라서 산재예방업무의 효율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公教育 내실화 통해 私教育費 부담 줄여야

교육부문은 교육재정의 확보에 중심이 주어지고 있다.

교육부문은 공교육부문에서 2000년도에 국내총생산의 6.3%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학부모들의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아울러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는 교육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높은 교육비의 부담은 생계비에 부담이 된다. 현재 사교육은 개인적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조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건전한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성취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기초적 소양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가능한 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교육 지원은 대학입시에 필요한 비용만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제화시대에 대학교육의 활성화는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특성상 대학을 관리·규제하는 차원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부설교육 및 운영은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이나 유능한 학생의 해외유학으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대학은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자율적 유인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투자뿐 아니라 보다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성과에 대한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각 학교별로 임의집단을 선별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가 좋은 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내온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질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데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일찍이 각 교실에 컴퓨터를 제공한 우리의 교육재정 능

력은 방학 전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상온에서 수업이 가능한 냉온풍기 시설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생의 수업능력을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근로조사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사회보험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각각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야 할 것이다.

복지, 교육 그리고 환경정책은 재정·금융 부문의 정책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고통을 느끼는 실체적 분야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재정을 포함한 정부예산의 40%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돼야

환경정책의 방향은 4대강 수질 개선 및 천연가스를 이용한 대기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환경기초 시설의 완비,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수변구역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뿐 아니라 그 관리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환경정책은 환경시설의 확충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환경시설은 관리와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관리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환경시설의 운영이 부실하여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오염원 관

리를 등한시한다. 따라서 오염원 부과의 원칙은 이들로 하여금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을 환경개선에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오염이 지속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디젤버스는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공해요인이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버스의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청정연료의 대체가 민간부문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최근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인상은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송수단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활용된다고 볼 때 이는 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있

이상이 이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체계가 없이 지출에 급급하다 보면 생산부문의 자금을 잠식하고 예산의 낭비와 함께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 2000년도 하반기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지역개발 · 국토계획 부문

IMF 사태라는 국가경제적 위기 속에 가려져 있던 국토계획과 지역개발 문제가 위기의식이 다소 진정된 지금 또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IMF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부정책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적 불균형 및 공간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수반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불균형 및 국토난개발, IMF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

IMF 사태는 대량의 실업과 많은 기업의 도산을 야기하였다. 이와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희생이 컸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의 실직자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IMF의 타격을 적게 받은 산업들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지역학과 교수
(hur5358@post.cau.ac.kr)

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신산업정책에 의하여 수도권지역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되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벤처기업들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지방은 지역기업의 쇠퇴와 지역인력의 유출에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는 수도권지역에 비해 활력을 잃은 지방경제에 대해 적지 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지역 자체의 힘만으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줄여나가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패배의식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지방의 이러한 소외의식들이 결과적으로 수도권집중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정치적 동기가 되었다.

한편 IMF 경제위기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산업 중의 하나가 건설산업 특히 주택건설업이었다. 급격한 실질소득 하락과 부동산경기 급랭으로 주택산업은 준폐의 기로에 섰고 정책적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적 주택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대도시 특히 서울외곽지역에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건설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나 기반시설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아파트의 난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

히 악화시켰다.

물론 IMF 이전 한국경제가 성장가도를 질주할 때에도 지역격차 및 국토의 난개발 문제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IMF를 거쳐 나오면서 이들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

의 해결을 바라는 지방과 주민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지역균형개발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문제가 최근 주요한 국가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에 관한 것이 그 하나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의 전면개편'에 관한 것이 다른 하나이다.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획단의 주관으로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지역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일극 위주의 국토단핵구조 및 만성적인 지역격차의 존재는 국가경영상 소망스럽지 못하며 따라서 분권화-지방화-균형화가 시급하다. 지역격차문제로 수십년간 씨름해 온 프랑스와 일본이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신수도의 건설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색중이다. 이들 과제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 촉진 문제,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지방유치 문제,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문제, 지방과학기술진흥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이 현행 토지이용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국토관리정비기획단'을 출범시켜 국토관리체계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농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등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수도권 및 부산권 등 6개 권역을 각각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올해 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지역균형개발 및 국토계획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볼 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정책추진의 일관성, 정책수단의 유효성, 정책목표의 명료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토 난개발 방지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시도로서 향후 우리 국토정책의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관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정책 필요

먼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앞에서 예시된 것처럼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과밀지역인 수도권지역 집중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수도권정책의 기초를 정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도권 개발지역

반대로 바꾸는 것이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수도권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을 국가경쟁력의 발원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수도권을 비수도권지역의 성장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선도하여야 할 거점지역,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2천여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정책전환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이 같은 정책기조를 어느날 갑자기 바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집중억제제를

다시 강화하여야겠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보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누가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모든 정책이 다 그러하지만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여야만 겨우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몇 년 사이에 양극단을 오가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두번째는 정책수단의 유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 아래

지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3개년이란 계획기간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지역균형개발은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권들이 한결같이 외쳐온 정책구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많지 않다. 그만큼 지역균형개발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같은 과업을 3년 안에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정책적 과욕이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기에는 좋으나 실제 먹을 것은 별로 없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있다. 더욱이 이들 프로그램들은 역대 정권하에서 지역균형개발정책 발표시에 거

의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던 것들이 많다.

집행상의 효율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선전효과와 극대화만을 노리다 보니 늘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정책수단의 반복은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고

질적인 병폐이기는 하지만 개혁을 부르짖고 나선 「국민의 정부」 역시 구습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한다.

세번째는 정책목표의 부재 혹은 모호함에 따른 문제점이다.

유효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정책의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영남권이나 호남권의 인구 및 GDP 비중이 수도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잣대가 전혀 없다.

지역균형개발정책이 ‘균형개발’이란 추상적인 정책목표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격차를 균형상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주어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외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대도시 근교에 주거지역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개발이익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신도시형 주거단지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다.

균형의 개념을 ‘결과의 균형’ 보다는 ‘기회의 균등’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한편, 수도권정책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비현실적 규정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실 수도권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의 80% 이상이 서울반경 30Km 이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로 경기도 전지역을 수도권정책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매우 이질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도권정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의 큰 부분이 잘못된 정책대상지역의 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비판의 소지가 많다.

수도권 일극 위주의 국토단핵구조 및 만성적인 지역격차의 존재는 국가경영상 소망스럽지 못하며 따라서 분권화-지방화-균형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연적 명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현재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그 효과도 의문스러운 잡다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선 안된다. 보다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도권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로 수십년간 씨름해 온 프랑스와 일본이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신수도의 건설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계획 정책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매우 용감하고도시의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체계의 개편은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라 통일까지를 염두에 둔 국토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토개발의 기본이념을 '선계획-후개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선계획-후개발' 원칙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좋은 계획, 엄격한 계획이 자동적으로 난개발방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선계획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도입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계획이 잘된 주거단지라 하더라도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할 만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거나 개발이익의 환수가 없을 때에는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의 불균형에 따르는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외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대도시 근교에 주거지역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개발이익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신도시형 주거단지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계획체계의 일원화'라는 제도개선의 기본목적을 고려할 때 새로 수립될 국토계획체계는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 범역이 중복되는 계획은 최대한 제한하고 다단계로 나누어진

계획과정은 그 단계를 가능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접경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으로 계획대상공간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여건에서 경기도 종합계획 같은 도차원의 지역계획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차라리 도계획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체계가 '도시기본계획-도시(재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이 계획기간과 계획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긴 하나 구분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이다.

한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다원화된 토지이용체계를 통합하여 전국도를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 토지이용체계의 중요한 정책 변화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토지이용체계를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3개 용도로의 통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용도(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보호지역)를 도시지역·관리(유보)지

역·보전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란 용어를 없애는 형식상의 개편에 불과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계획·이용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5개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4개 용도를 혼합하여 보다 새로운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 개발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기반시설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 보여진다. 그러나 비록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기반시설의 계획·건설·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관리 및 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개발업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국가지원비용, 자치단체 투자비용 등을 합하여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남북한 경제협력 부문

남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합의했다. 경제력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이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부터 경제협력의 인식과 제도를 합의해야 한다. 쉬운 문제부터,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정상회담은 화해·협력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있다. 경제협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제협력의 장기적 비전과 현실적 장애의 괴리를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경제협력은 주로 희망적 미래가 홍보되었다. 이제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물론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하지만, 냉전적 비관주의도 청산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rikyc@seri21.org)

경제의 생존전략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현실적 장애들을 실사구시적으로 극복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보장협정 등 논의 과정에 민간기업 의견 수렴해야

우선 필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다. 남북한은 이미 교류협력 부속 합의서에서 대체적인 틀을 합의했다. 남북한은 이미 경제회담(84.11~85.11.20)에서 수송로 연결(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문산 도로 연결, 남포항·원산항

과 포항항 개항), 공동어로, 청산결계 방식 등에 관해 의견일치를 본 바 있다.

1992년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채택시, 남북한은 경제협력의 방법과 제도적 장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상호의견을 조율하여 기본틀을 합의했다. 2년여간에 걸쳐 상호 의견을 내놓았고 토론을 했으며, 그 결과 합의서를 만든 것이다. 대략적인 방향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남한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북한이 남한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채택 이후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나 대우의 합영회사(민족산업총회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투자지분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배타적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향후 남한 전용공단 등의 유

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관련법의 정비와 동포 우대조항 등의 법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회담이 열릴 것이다. 경제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는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은 실질적인 경험 주체인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표는 직교역체제 정비다. 직거래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신문제, 우편물 교환, 대금결제 방식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하며 북경에서 한반도로 교류 무대를 옮겨야 한다. 판문점을 통한 경제인들의 상호 방문은 직교역체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對北 인프라 투자 재원, 최소한 수준은 남측이 조성해야

정상회담은 북한 인프라 정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철도 연결 사업은 물류비를 낮출 수 있고, 분단종식의 경제외적 효과도 있는 상징사업이다. 북한의 전력난을 고려할 때, 에너지 협력도 시급하다. 이 밖에 통신·항만·도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은 실질적인 경험 주체인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표는 직교역체제 정비다. 직거래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신문제, 우편물 교환, 대금결제 방식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하며 북경에서 한반도로 교류 무대를 옮겨야 한다.

로 연결 등의 사업도 경험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물론 북한의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비용을 남측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인프라란 투자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북한이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남측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공적 차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은 북미 관계 개선 및 북한의 시장경제 변화를 전제로 회원 가입과 공적 차관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도 지원을 받은 사례는 있다. 팔레스타인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그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미국의 결정에 의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특별 신탁기금 명목의 3억2천만달러, 26개국이 참가한 신탁

기금(Holst Fund) 2억 6천만달러를 지원받았다. 국가로서의 자격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미국이 세계여론을 주도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례다.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 등이 주도하는 신탁기금을 공여

받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포기, 테러국 이미지 탈피, 경제정책 변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북미 관계 개선이 핵심 변수지만, 그전이라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호주, 일부 EU국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신탁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북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도 어렵다. 건설-운영 후-기부채납(BOT)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채권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운영수익 역시 당분간 기대할 수 없어 상식을 가진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 가능한 투자 재원은 남북협력기금뿐이다. 현재 경수로 계정 및 공적 기금을 제외하면 2,180억원 정도가 가용 가능하다. 협력기금이 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북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목적에서 사



삼성전자 대동강 TV공장

회간접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목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000년말까지 최소 1조원 정도로 자금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무상지원 비중을 줄이고, 자금회수가 가능한 유상 대출의 비중을 높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하지만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철도만 하더라도 경의선 단절구간 공사(문산-봉동 20km) 기간은 3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북한측 구간의 시설개선과 궁극적인 복선전철화 사업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우선 단절구간공사를 정부 재원으로 시작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개선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내 화력 발전소 설비 개선,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 등 적은 투자로 당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등 내부적 제도정비 필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을 통해 안보와 경협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제조업의 대북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재수출 조항에 따른 통상문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비확산 통제물자 및 기술을 불법 유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장비, 공작기계, 통신장비 등 고도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최종용도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 남북교류에서 전략물자 반출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용도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정해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및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남북

경협을 총괄하는 정부직제 신설 및 부처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승인 절차 등 구체적인 대북경협 사업과정에서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정보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화해·협력 시대는 시작되었다. 상호의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탈냉전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다. 체제 경쟁의 시각에서 우월한 경제력을 과시할 만큼 우리 경제의 여유도 없다. 이제는 남과 북이 상생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제협력은 화해·협력의 출발점

일단 경협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활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협이 상호 호혜적이기 위해서는 경협 주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경협을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성이 있어야 대북투자는 지속된다. 정상회담은 북한 경제 활성화의 역사적 기회이며, 남한의 경협 주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의지를

對北 인프라 투자는, 우선 철도 등 단절구간공사를 정부재원으로 시작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내 화력 발전소 설비 개선,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 등 적은 투자로 당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목하고 있다. 경제회담에서 우리가 북한측에게 강조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환경 역시 필요하다. 미국은 99년 北·美간 베를린 합의 직후 발표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최근(6.19) 발효했지만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GSP) 등 핵심 조치들은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제한되고, 위탁가공이나 직접투자의 규모도 확대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제재를 유력한 외교적 지렛대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낮은 신인도로 인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적 투자의 환경 및 재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협력을 위한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의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동시에 민족사적 명분과 미래의 가치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 역시 국내외 시장주체들의 냉정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사업만이 북한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결국 경제협력은 북한·정부·민간 등 경협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다.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분단비용보다 평화정착의 편익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변화할 때만 기다린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남쪽 내부에서 화해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이 경제협력이다.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

— 산업 및 통상 부문

정 부가 발표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과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적정수입규모 달성이 중요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까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경상수지흑자의 관건은 상품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려면 환율이나 해외경기의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적정 수입규모의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3저 호황기와 외환위기 직후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govjai@kkucc.konkuk.ac.kr)

침체기를 제외하면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안팎의 적자를 보여왔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장경로하에서 경상수지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차제에 경상수지와 성장간의 선택문제를 직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WTO체제하에서는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송 및 정보통신시설

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출보험 및 보증의 강화,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도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주요 교역국과의 원만한 통상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이익집단의 이해를 고려한 나머지 통상정책의 원칙이 흔들린다면 지속적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통상마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마늘분쟁이다. 중국산 마늘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우려하여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행히 한국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수입에 대하여 일정 쿼터 내에서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대

신 중국은 수입금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통상마찰이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도국과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알려주는 신

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WTO에 가입하더라도 막대한 잠재시장을 가진 수요독점자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한 통상압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것에 대비하여 분명한 원칙과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통상정책의 일관성 유지돼야

최근 수년간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쌍무협상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자간 국제규범이 최선의 방어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해서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명확한 논리가 없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을 남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쇄고기수입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 및 정보통신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출보험 및 보증의 강화,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WTO를 통한 최종해결을 모색한다는 전제하에 쌍무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측 주장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제규범에 합당한 경우에는 당당하게 입장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마늘분쟁에도 불구하고 WTO 하에서의 정당한 정책수단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이나 반덤핑관세의 활용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이해조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부처간 갈등이 여과되지 않고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는 통상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계층의 반대 때문에 통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다자간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는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은행이나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주된 정책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자동차산업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해외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부품산업을 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에 부과되는 비용이 사후적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과연 이 같은 유치산업보호론이 대우자동차라는 특수한 경우에 부합되는가는 회의적이다. 크루그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헐값매매에 따른 국부의 유출여부는 기업매각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결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인수되었는가 이상의 더 좋은 판단기준은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높은 개방도를 고려할 때 국제규범의 준수가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는 통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제규범과의 부합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되 일단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외나 편법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조변석개식의 정책결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주의 원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바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협력 움직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주의적 협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WTO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추진은 단계별로 신중하게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협의개시에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에 걸친 포괄적인 자유화 협상이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이다. 한·일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한·일자유무역협정 구상에 대한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일 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만든 최종재를 미국과 같은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구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철폐되어 내구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수출은 일본소비자수요의 특수성 이외에도 일본경제의 독특한 상관행 및 유통구조의 왜곡과 같은 비관세장벽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지금까지의 수직적 분업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대일 역조가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관세율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할 경우 한국은 61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지만,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무역수지 악화효과는 15억3천만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부문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정태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동태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촉진,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연간 2.8% 포인트의 성장효과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 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는 양국의 특수한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

이 틀림없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경제협력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일본과 칠레의 위상차이만큼이나

일본과의 자유무역지대형성은 칠레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무역지대 형성논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9%로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2.9%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수지역조가 크게 악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어 수평분업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이 치열한 중화학공업분야에서 '빅딜'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동태적 효과를 담보로 단기적 무역역조 심화와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한편,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장벽이 크지 않은 분야부터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과의 공동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장벽이 크지 않은 분야부터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과의 공동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낮아진다고 하여서 우리 기업들의 대일 수출이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마케팅과 함께 비교우위품목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한·일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앞서 시급한 과제는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면 일본에 대한 역수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 3시장 공략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동남아로 투자선을 전환한 이래, 한국에 대한 일본투자자들의 인식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의 분업체제 형성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상

황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양국이 추진중인 한·일투자협정의 매듭과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조치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확대를 가져오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가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치 않고 원화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위상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였고,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7.8%를 기록하여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절차의 간소화 및 서비스제공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투자여건, 특히 영업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조세제도의 불합리성, 지적재산권 보호미흡, 통관 및 무역 제한조치, 시장접근의 제약, 외국인 주거환경상의 불편 등 경제자유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여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외국인기업의 성장기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정책이 전략적 목표하에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은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청사진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략적인 목표하에서 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개별협상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담당관료

들은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장받고 있다. 투자인센티브체계의 골격만이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우리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제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입주나 부지분양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핵심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대상기술을 매우 상세하게 열거하여 공표하고 있어 기술발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일일이 인센티브 대상기술을 지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도 시행령에는 중분류의 산업정도만 열거하고, 구체적 대상기술은 실무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유치시 인센티브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투자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획득한 중요한 산업정보는 산업발

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제한적이지만 산업정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시비를 감수 하더라도 과감한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해외투자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못지 않게 해외직접투자도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제3시장에 대한 우회수출뿐 아니라 내수시장 개척, 기술습득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유치국과의 분업을 촉진하여 수출과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경상수지 안정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함께 보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필수의약품 확보가 선결과제



안효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의 약분업은 '의사는 전문적 진료를, 약사는 정확한 조제·투약' 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진료는 의사가 전문가인 반면 조제는 약사가 전문가인바, 각자 전문영역에 따른 전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는 전문적 진료를 약사는 정확한 조제·투약을

우리나라의 의약계는 여지껏 약사도 진단·처방하고 의사도 조제하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매우 컸다. 국민들 누구나 약국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쉽게 약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절제한 의약품 사용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의 5~7배나 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필자註: VRSA-가장 강력

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으로도 죽지 않는 세균)의 출현은 그 위험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사례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전문적인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이 크게 줄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된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조제라는 이중점검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의약분업은 처방전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건네주게 되므로, 환자는 자기가 어떤 병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처방한 약을 약사가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약사는 직접 약을 처방하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하게 되어, 약의 정확한 조제 및 환자에 대한 약의 사용법·효과·주의사항 등의 설명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보다 양질의 투약서비스를 하게 된다. 의사 역시 진찰 등 질병의 진단과 상담에 전념하게 되어

충실하게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을 받는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아오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주면 이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가 조제해 주는 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국을 주로 이용했던 환자는 앞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화제나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은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 변동을 보면, 의원에서 가벼운 질환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 총액이 현행과 동일하고, 진료비가 1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약국에서의 조제료와 약값이 8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의사와 약사 상호간 신뢰회복이 긴요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간에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이 의사·약사 각각의 전문영역에 따른 전문역할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에서 출발하는만큼, 의사 및 약사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해 나가야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폐업 과정에서 보듯이 의·약간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약계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은 매우 커질 것이다.

의·약 양측은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을 버리고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별로 구성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간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약계가 서로의 전문영역에 따른 역할을
인정하고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구성된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에 협력해야 한다.**

에 적극 참여해서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준비이다. 의약분업하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환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의약분업 제도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약국은 동 목록에 기초하여 필수 의약품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2만여 가지의 의약품 모두 비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송센터를 구축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의약품 등 약국에 의약품이 없는 경우 배송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약국에서는 환자가 내방했을 때,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이 빨리 조제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고, 널찍한 대기공간, 주차장 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전국의 모든 약국에 필수적인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환자들이 의약품이 준비된 약국을 우선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약국의 의약품업의 준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약품업 준비된 약국'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의 준비상황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여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병·의원은 약국에서의 의약품 준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처방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공유는 의약품업의 정상적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병·의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약국에서 의약품을 비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환자의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의료계는 의약품업 실시를 위한 관련정보를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약사측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환자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약국으로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저빈도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약이 비치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어 환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팩스 설치 및 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처방전의 팩스 전송은 처방약의 조제시간을 단축시킨다. 특히, 외래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는 팩스 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약국배치도 등을 게시하여 약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비치와 배송체계 구축에 차질 없어야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은 의약품업 실시를 위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반면, 환자들은 이제까지의 의료이용 행태에서 벗어나 의약품업 상황에 맞도록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업을 실시하게 되면 시행초기에 국민들은

**필수의약품의 확보는 의약품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의료계는
신뢰성있고 정확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약국은 이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저빈도
사용약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송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소 불편해질 것이다. 현재까지 하나의 기관만 방문하면 진료 및 투약을 한꺼번에 받던 '원스톱 서비스'에 익숙했던 국민들이 진료받는 기관 따로, 약조제받는 기관 따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일본의 '단골약국제도'를 소개하겠다.

'단골약국제도'는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가리키는 관행상의 제도이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잘 알아주는 약국의 단골손님이 되는 것이고,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에게 이용하기 편하도록 서비스를 잘하고 환자의 체질이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약력관리나 복약지도 등으로 환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약품업은 약물의 파인투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를 가장 잘 실현해줄 수 있는 것이 단골약국이다. 만일 두 가지 질환으로 각각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고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가 각각의 처방전을 서로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는다면 각 처방전간 약물간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체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환자가 동일한 약국을 이용한다면 약물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골약국에서 환자의 알레르기 등 체질이나 직업·생활환경·습관, 가족의 병력 등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 환자는 약국으로부터 이를 감안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단골약국은 환자의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의약품 정보제공 등을 책임있게 완성시켜 환자가 안전하고 유효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환자들이 병원 따로 이용하고 약국 따로 이용하는 상황을 귀찮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받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거나 집에서 가까운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정해 놓으면 환자 자신에게 의사 및 약사의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편은 잠시, 건강은 평생이다. 의약분업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시행초기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모든 국민은

의약분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인정하고 상호 협조 및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신장시킴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을 가져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전한 약품사용, 의사는 진료에의 전념, 약사는 조제·투약에의 전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이는 신뢰성 있는 의료제도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틈새시장은 개도국에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수출확대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전면으로 나오고 아세안이나 중남미 각국들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우리의 주시장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서 점차 밀려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90년대 이후 개도국시장의 개척에 힘을 쏟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올리고 있다.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90년 30.3%에서 97년에는 55.9%까지 확대되어 오히려 선진국의 비중을 앞서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품질과 기술로 승부해야 할 선진국 시장에서의 성공 없이는 개도국 시장에서의 수출증대로 지속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틈새시장 개척의 사례로 컴퓨터를 들 수 있다. 우리의 PC수출은 89년 9억8천만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축소되어 96년에는 1억6천만달러로 축소되었다.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98년말 삼보컴퓨터는 국내의 부품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고기능을 유지하면서 제품가격을 크게 낮춘 저가 PC를 개발하여 미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98년 3억4천만달러로 98년 연간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국 시장도 아이디어와 제품다양화로 얼마든지 개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출처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刊

시민단체의 최종안 수용해야



이강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lkw@mail.ccej.or.kr)

지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의약분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만에 시행된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의약분업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유예된 1년을 논쟁과 대립으로 소비하고 또 다시 계도기간을 겪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협상과 논의 역시 의료계의 지나친 주장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정치권의 보신주의로 왜곡되는 등 의약분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의약분업이 의·약사의 이해관계로 굴절 · 왜곡돼선 안돼

국민의 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은 의·약사만의 이해관계로 조정되거나 굴절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논리로 탈색되거나 지연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관하여 지난 1년 동안 투자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와 의약계, 국민 모두는 의약분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저항의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지금, 의약분업의 성패는 「약사법」 개정을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과 그간에 노정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동안 의료계의 '선보완 후시행' 요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대해 왔던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98년 5월 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이 의사회와 약사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99년 2월 의약분업 협상을 위한 국민회의의 노력마저 의사회와 약사회의 반대로 최종 결렬되었다. 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무산되자, 정부는 99년 2월 18일 의약분업 강행 방침을 밝혔고, 마침내 의사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99년 3월 시민단체·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의 참여 속에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공청회'가 다섯차례 열린 후, 최종적으로 작년 5월 10일 현재의 '의약분업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의약분업 합의안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오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서, 이를 번복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약분업 합의안'을 잘못된 의약분업안으로 규정하며 의약분업 합의안 수정을 위한 요구를 점차 늘려 분업시행 한달 전에 최종 10가지로 정식화해서 주장했다. 요구사항은 대개 의약분업 합의안이 약사의 임의조제의 여지를 조장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이 지나치게 많이 분류되었고, 의사의 일방적 희생은 부당하다는 점을 담고 있다.

7월 1일 분업시행 전 핵심적 논점이었던 임의조제와 의약품분류에 대하여 언급하면, 현행 의약분업 합의안은 처방전이 없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환자의 알권리와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소분 판매나 날개 판매를 금하고 통채로 판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임의조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일반의약품을 팔면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끼워팔거나 PTP 및 호일로 포장된 약을 혼합으로 판매할 경우 임의조제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약사의 양심, 국민들의 의료관행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시민의 상호협력에 의한 감시를 통해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약품 분류는 97년 이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품목 3,157개 중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776개(56.3%),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1,234개(39.1%)로 되어 있다. 의약품분류는 의약학적 안정성과 보건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왔다. 즉, 의약품 분류시 약물사용에 대한 안정성·적응증·부작용 등 의약학적 기준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견해가 상이할 때, 국민들의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여건에서 완벽한 의약품 분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가 전문가의 의견과 의사와

**임의조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여 일반의약품을
통약 판매하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단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시민단체 최종안이
「약사법」 개정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약사 사이의 절충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이는 의약품 분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분업시행 이후 정기적인 의약품의 전면적 재분류가 가능한만큼, 의약분업 이후 처방 및 조제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이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최종안이 「약사법」 개정안으로 채택되길

6월 24일 영수회담은 의약분업 시행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충격적 사건이다. 의료계의 주장에 일정 정도 동의한 세력에게는 상생의 정치로 평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 합의안을 파기하며, 분업시행에 관한 구체적 경험이 없이 또 다시 선행적 논쟁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료계가 교수·학생·개원의·전공의까지 총단결하여 사상초유의 집단폐업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에 저항한 것은 주장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의약분업 합의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관한 의·약계, 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됐다는 것은 의약분업 시행과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유증과 문제점을 야기했다.

첫째, 의·약사, 시민단체, 정부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둘째, 힘의 논리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현실적 힘으로 인정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

셋째,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사실은 의약분업의 연착륙에 현실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일련의 부작용과 혼란은 「약사법」 개정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최소화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간의 경험은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반성과 각성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역사적 의미를 두고, 합의정신이 파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을 현실로 받아들이만큼, 의료계는 대승적인 안목에서 「약사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지난 7월 10일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 개정에 관한 최종안을 의·약계, 정부에 제시했다. 임의조제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여 일반의약품은 통약 판매하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단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이 정착될 내년초부터는 주사제 예외규정 중 '차광'을 삭제했다. 의약분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 양등을 막고 국내 제약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만큼, 저가의 약품을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의 처방권 존중 요구를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나, 국민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협의·조정한 사용의약품목록 내 처방으로 국한했다. 또한 중앙, 시·도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구성과 기능을 법제화하여,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에서

의약분업의 대의에 의·약계가 동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 전면시행되는 현실에서 의·약사간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분업시대에 맞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와 토론, 협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사용의약품 목록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용의약품은 상품명 기준으로 600품목 이내로 하며, 필요시 매분기 45일 전에 추가로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최종안은 작년 5·10 합의정신의 기초 위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임의조제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료권의 존중을 거의 반영한 것으로 「약사법」 개정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분업은 오래된 보건의료 관행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면에서 의약계는 물론 시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의료정책에 따른 무원칙한 의·약 인력의 양산과 의료전달체계의 특성화 부재 및 부실한 의보재정 등 보건정책의 난맥상은 의약분업 시행의 연착륙을 저해하는 근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대의에 의·약계가 동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에서 의·약사간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분업시대에 맞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와 토론, 협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여 의·약사,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는 '정부의 역할'이 의약분업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

의료계·약계 상호간 불신제거가 관건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kpca@kpca.co.kr)

의 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길은 이미 간결한 해답이 있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불문율로 행해지는 미국처럼 의사·약사들이 상대 직능을 존중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수십년 관행을 바꾸는 데 따르는 환자의 불편 문제도 의사·약사들이 분업의 장점을 친절하게 설명한다면 단기간에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협력기반이 없다. 적어도 약사들쪽에서 본다면 99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온 국민 앞에서 악수를 할 때의 모습에서 협력이 안되리라는 우려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폐업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특히 1차 의료영역에서의 의원과 약국은 경쟁관계, 또는 상호 대립적 입장으로 존립해 왔다. 약국 밀집지역에 의원이 적고 의원 밀집지역에 약국이 적은 상황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현상은 서로 일부분 중첩된 업무영역을 적절히 공유하고 묵인해 왔다는 의미도 된다. 의사가 의료기

술이 아닌 약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약사가 일부분 의사역할을 하는 가운데 양측은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의약자원 분포나 국민소득 영향으로 거의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의료보험 확대와

경제수준 향상, 양산체제로 바뀐 의약인력 수급 등 상황변화가 뚜렷했음에도 의약계는 스스로 문제를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광고문안을 보면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다. 만약 약사측에서 “의사는 약업인이 아닙니다”로 응수했다면 결국 닭과 달걀의 소모적 논쟁에 불과했을 것이다. 한약분쟁의 본질도 의료인이 약을 점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듯이 의료인이 약을 취급하는 한, 약사가 약 취급에 일방적으로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의약분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해결점이었다.

또 다른 예로 약의 오·남용 문제가 있다. 약을 약국에서 마음대로 팔기 때문에 오·남용이 심하다는 논란이 많았으나 약국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투약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결국

은 제도(정부)와 의사와 약사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문제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논란도 의약분업으로 거의 개선되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업무중첩이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사측에서 문제를 확대시킴에 따라 법 재개정 분쟁까지 오게 되었다. 특히 의사들은 조제권을 다 내주었는데 약사에게 진료행위가 잔류되었으며 오·남용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시행해 보지도 않은 가설 때문에 폐업투쟁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심각한 가설이 바로 현실이며, 과연 약물 오·남용이 더 커질 수 있는가가 주요 판단 요소인 셈이다.

진료권 침해라면서 제기된 논점은 이른바 임의조제 여부이다. 그러나 이 논란의 대상이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의약분업은 특별 관리할 약을 구분,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되도록 하는 전문약을 분류하고 규제하자는 것이 취지이며 그 외의 일반약은 약사의 관리 아래 판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측 주장은 일반약을 낱알로 두세 가지를 판매한다 해도 조제가 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두통이 나고 콧물이 나는데 약을 달라고 했을 때, 해당 약 두 가지를 약사가 선택해 주면 조제라는 것이다. 반면에 환자가 무슨 약을 지명해서 주면 판매니까 괜찮다는 논리였다. 일반인이 스스로 약을 판단하는 것은 괜찮고 약을 배운 약사가 주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통이 나는데 선택한 약이 맞는지 약사가 진단도 안하고 어떻게 아느냐는 반문이 곁들여 있다. 이 약은 어떤 증상에 쓴다는 것을 배운 약사들 입장에서 간단한 對症요법 즉, 일시적으로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쓰는 것까지 규제당해야 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또한 오·남용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어 포장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나머지 최소 판매단위를 30정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도

약의 최소판매단위를 30정 수준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다량구매하게 되어 오히려 남는 약을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모순이 생긴다. 또한 약효동등성이 확인·검증된 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로 발전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다량 구매하게 되어 오히려 남는 약을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분업이 되면 61%의 약을 처방전 없이는 투약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오·남용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측에서 제기한 가설은 너무 침소봉대되었거나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법 재개정 대상으로 올라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대체조제의 문제이다. 대체조제에 대한 현행 규정은 정부가 약효동등성을 확인·검증한 똑같은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것도 환자가 굳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처방의사에게 3일 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약효동등성을 믿을 수 없으니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사실상의 대체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전동의를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통화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약국에서는 수만종의 약을 비축해야만 한다. 그래도 처방된 약이 없을 경우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만일 의사가 부재중이면 약국에 똑같은 성분의 약이 있는데도 그 환자는 약을 받지 못하고 다른 약국을 찾아 나서야 한다. 따라서 의사측 주장은 의사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 약국과 환자가 희생하라는 논리에 다름 아

니다. 그 권위는 처방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처방권은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특정회사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약사가 대체조제를 상습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사후통지를 하는 번거로움을 되풀이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대체조제를 시도하려면 대체하는 약에서 특별한 이윤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보험약가제도가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기 때문에 약에서는 마진이 전혀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마진이 없는데 환자의 의심을 사가면서까지 굳이 대체하려는 약사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커넥션 문제도 약국은 처방선택권이 없고 처방전 접수가 되어야만 투약을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약국에 커넥션을 맺어 놓을 제약회사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사측 불만의 핵심은 양심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든 여건에 있다. 이를 좌우하는 것은 알려진 바대로 의료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은 바로 의사의 수익을 의미하지만 그동안 심사과정에서의 삭감분쟁 등으로 쌓인 심리적 불만도 수익성 못지 않게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심사와 삭감 여부도 보험재정을 관리하려는 보험자측과 부딪히는 문제이므로 결국은 돈 문제에 연결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여유 있게 많이 내면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그만큼 축소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삭감과 부당청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도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려면 사회보장비용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이해심과 인내를 갖고, 서로를 불신하고 네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것을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닌만큼 공급자측인 의사·약사들이 일단 인내하면서 차츰 국민들의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길은 이미
해답이 있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불문율로 행해지는 미국처럼 의사·약사들이
상대 직능을 존중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신뢰도를 쌓아간다면 점차 개선되리라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약사측 입장에서는 의사측에 대한 불신도 많지만 대립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일이 많다.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의사쪽에서 불신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종전과 같이 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만큼 이를 설득해서 전문약이 필요한 경우 의원에 가도록 적극 권해야 한다. 작은 사례 하나로 전체의 신뢰도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갈등상태를 보면 분업의 장래가 험난하고 암울하게 보일지 모른다. 어이없게도 해답은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찾아야 하고 신뢰와 협력이라는 추상적·관념적 과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모두의 인내가 절실하다. 문제는 시행초기의 혼란과 진통인데 몇 달만 극복하면 약국의 의약품 비축문제도 대부분 해결되고 환자들도 익숙해지면서 선진국과 같이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또다른 당사자인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원고청탁을 한 바 있으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지 않아 의료계측 의견이 게재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유전자 지도와 인간의 운명



최석식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sschoi@most.go.kr)

미국 동부시간으로 2000년 6월 26일 10시 00분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 초안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 블레이 총리가 위성으로 연결하여 발표하였다. 1990년부터 이 연구에 참여했던 세계 18개 국가가 동시에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30억달러를 내고 전세계 350개 연구소가 참여해서 분석한 유전자 염기서열의 구조가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었다. 전체 염기의 85%가 분석된 상태의 발표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석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흔히 게놈 혹은 지놈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유전체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유전자를 모두 갖고 있는 한 세트의 염색체이다. 잠깐 생물학 교과서를 펼쳐 보기로 하자.

인간 세포의 핵 속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으며, 그 안에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다. 그 DNA의 유전정보는 약 30억쌍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유전자를 형성한다. 유전자의 기본이 되는 염기는 A(아데닌), G(구아닌), C(시토신), T(티민)의 네 가지이며, 이 네 가지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개된 1번 염색체의 유전자 지도에서는 'GGATCCACGTGGCCCATAGC GCACCCACAGGCCTTTTCT GGGAAAGCAGTCTTCTCTCG'로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유전자 지도는 99.9% 동일하다. 0.1%의 편차에 의해 인종이 갈라지고 천재와 둔재로 나누어진다.

3만 내지 15만개로 추정되

는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면 질병의 진단과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번 염색체는 알츠하이머 치매, 2번 염색체는 대장암, 3번 염색체는 폐암, 4번 염색체는 헌팅턴병, 5번 염색체는 발육부진, 6번 염색체는 소아형 당뇨, 7번 염색체는 비만, 8번 염색체는 조로증, 9번 염색체는 악성흑색종양, 10번 염색체는 망막위축증, 11번 염색체는 심장마비, 12번 염색체는 폐닐케톤뇨증, 13번 염색체는 유방암과 망막종양, 14번 염색체는 알츠하이머 치매, 15번 염색체는 골격과 순환계 기형, 16번 염색체는 신부전증과 고혈압, 17번 염색체는 유방암과 난소암, 18번 염색체는 췌장암, 19번 염색체는 동맥경화증, 20번 염색체는 면역결핍증, 21번 염색체는 근위축증, 22번 염색체는 신경섬유종증, 23번의 X염색체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이상, Y염색체는 성 결정과 불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라고 한다. 따라서 각 염색체의 정상적인 유전자와 개인별 유전자 상

태를 비교하는 DNA 칩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유전자 지도 초안의 공개가 가져다 줄 파급효과이다. 이것은 생명공학 중심의 세계 질서 형성과 경쟁체제 개막의 신호탄이다.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거룩한 연구결과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라 놓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 미국의 셀레라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300대나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염기서열 자동분석기가 우리나라에는 모두 합쳐 20여대밖에 없다. 유전자 기능 분석을 위한 DNA 칩의 제작과 활용 기술은 개발 착수 단계이다. 유전체 구조와 기능 분석에서 위력을 발휘할 생물정보학 분야의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유전자 특허전쟁에서 참패한다. 생명산업의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영락없이 추락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데 국가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 유전자 지도를 무료로 NIH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국의 참 뜻을 헤아려야 된다. 우리가 따로 분석하지 않고도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유전자 염기서열의 구조 분석보다는 기능 분석과 활용이 정작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서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염기서열 구조 분석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앞으로의 기회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거액을 투입해서 만든 유전자 지도를 무료로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유전체 분야에서 자기네를 넘볼 후발국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특히 미국은 저만치 달아나 있다는 징표이다.

셋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영역이 인간유전체이다. 선진국들이 소홀했던 영역을 골라서 특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1999년에 착수한 것이 과학기술부의 '인간유전체 기능 연구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과 간암 등 난치병의 진단·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정부예산 1,330억원을 포함해서 총 1,770억원을 투자하여 위암과 간암의 치료 생존율을 현재의 10~30% 수준에서 2010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넷째, 유전체를 포함한 생명공학 치료약 연구는 착수한 지 10~15년이 지나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산업정책보다는 연구개발 정책이 우선되는 영역이다.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으로 일정한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생명공학 벤처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연구원들은 기술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벤처나 산업은 그 다음이다. 인터넷 벤처처럼 접근하다가는 국가적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유전체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은 인간의 윤리를 파탄시킬 수 있다. 인간유전체 기술이 발전되면 개인별 유전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이 공개되면 악용될 수 있다. 태아의 유전자를 감별해서 유전병을 미리 치료할 수 있지만, 열등한 태아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워질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치료를 마음대로 받아서 오래오래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으며, 보험금도 많이 내야 된다.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막아야 한다. ■

IMF 가 노동시장에 남긴 것



정병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들이 가장 컸다고 하겠다.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먼저, 실업률 8.6%로 실업자가 178만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근로계층이 고용불안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사회전체가 구조조정과 대량실직사태를 겪으면서 실직의 문제가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고용불안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자신이 실업자가 아니었더라도 가까운 친지, 형제자매 중에 실업의 고통을 겪은 사

람이 누구나 있었기 때문에 실업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실업대책 추진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IMF 체제 하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탄력적 인력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규직 고용보다는 임시직·계약직 고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비중이 97년에 45.9%였으나 98년에는 47%, 99년에는 51.7%로 늘었고 2000년에 들어서는 5월 현재 52.9%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심리적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불완전취업, 단속적 근로 등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연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한 지니계수가 1997년 이래 계속 높아져 소득분배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빈곤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적 빈곤감이 인간에게 더 많은 고통과 좌절감을 준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이 큰 문제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고민의 중심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정책 추진 방향도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소득분배 구조 개선과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먼저 자발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취업이 되어도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자금, 의료비, 생계

비 저리용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1999년부터 병원·백화점 등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사업체에 대해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해 왔다. 임시·일용직 등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올해 들어 노동행정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표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한 추진중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1963년 처음 법이 제정되어 지난 30년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영세업체일수록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능력의 부족, 산재보험기금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못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드디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IMF를 거치면서 2차적인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으로 몇 개월치 임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을 때 그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처지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1998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되었다. 이제 임금채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자들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현재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서의 적용확대를 추진중이다.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금년 9월부터 적용확대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저임금일 가능성이 크므로 당연히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완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조금이라도 그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사회도 그에 좀더 다가가 있을 것이다.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은
물가안정정책, 소비자정책, 사회복지시책 조정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국민생활국은 외환위기시 물가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99년에는 소비자물가를
역사상 최저수준인 연평균 0.8%에 그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앞줄 왼쪽부터 김용환 복지생활과장, 김동수 생활물가과장,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오동환 물가정책과장, 강형욱 소비자정책과장
뒷줄 왼쪽부터 정지원 서기관, 황문연 서기관, 이준균 서기관, 윤성호 사무관, 이병근 서기관, 백용천 서기관

“대내

가를 잡지 못하면 정권도 못 잡는다.”

과거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권의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 경제 분야 특히 물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5공 시절의 물가안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물가는 흔히 경제의 성적표라고 한다. 물가관리에 실패하는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만큼 물가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지어는 물가가 정권의 사활과 직결되기도 한다. 물가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품을 유발하는 데 그칠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민심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물가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 대통령이 물가에 큰 관심을 갖고 매년 안정목표를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FRB의 그린스핀 총재는 인플레이가 우려되면 금리인상 발언을 통해 진정시킨다.

이렇게 중요한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곳이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이다.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에는 물가정책국이었다. 경기가 상승했든, 통화량이 증가했든, 태풍이 불어 농작물이 훼손됐든 간에 물가가 오르면 그 책임은 국민생활국이 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생활국 직원들은 항상 걱정

이 많다.

외환위기 때는 국민생활국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한 적이 있었다. 당시 소비자물가는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3개월 만에 무려 6.8%나 뛰었다. 올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이내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 당시 물가는 엄청나게 불안했던 셈이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급등은 국내 공산품 및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과 사재기 현상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당시 국민생활국은 거의 매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특히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와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신용장(L/C) 개설 원활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수입원자재에 대한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 등 동원 가능한 재정·금융 지원책을 강구했다. 매점매석·담합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노력과 함께 환율안정세에 힘입어 98년 중반 이후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도 단기적 긴급안정대책에 머물지 않았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시장에서의 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물가대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98~99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라 농작물의 수급불

안이 우려되자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축·수협 등과 협력하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물가안정 노력의 결과로 9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8%에 그쳤다. 이는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吳甲元 국민생활국장이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그만큼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간 다져온 물가안정 기조를 해칠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물가가 전월보다 0.5%, 작년에 비해서는 2.2%나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원유 증산이 불투명함에 따른 고유가의 지속, 임금의 가파른 상승, 여름철 수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국은 목표치인 연평균 2.5% 이내로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물가관리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게 국민생활국의 원칙이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먼저 정부가 개별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거나 민간에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14개, 지방정부 10개 등 모두 24개의 공공

요금뿐이다.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분야도 일부 농축수산물 등으로 극히 한정돼 있다. 게다가 행정규제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정부가 과거와 같이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점차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물가안정 대책 조율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또, 물류 등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자의 물가감시·견제 기능 강화 등 물가안정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국민생활국은 물가안정대책, 소비자보호, 사회복지 등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대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물가정책과는 명칭 그대로 물가안정대책의 수립, 물가동향의 분석 및 전망,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제반 물가정책을 총괄한다.

생활물가과는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 관련 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집중한다. 그래서 기상청 만큼이나 날씨에 관심이 많으며, 명절 때나 집중호우, 태풍 시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기도 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집값, 전·월세값은 물론 대중교통요금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물가정책과 및 생활물가과는 달리 소비자정책과는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을 총괄한다. 소비자정책은 21세기 소비자주권 시대를 맞아 그 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선진 소비자 보호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선 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했고, 올해 1월에는 결함 있는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ies)법을 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안전문제, 사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권익보호,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 등 소비자정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자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생활과는 국민의 복지생활 관련 정책들을 협의·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 이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고유가의 지속, 농산물 수급불안 등 그간 다져온 물가안정 기조를 해칠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민생활국은 목표치인 연평균 2.5% 이내로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각오이다.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오는 10월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금제도에 이르기까지 복지생활과의 소관업무는 광범위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축소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국민연금 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업무수행에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 열린 물가대책 차관회의

吳甲元 국장은 후덕한 인상답게 부하직원들에게 자상하다. 꼼꼼한 스타일인데다 서민적이어서 국민생활국장으로는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요한 일은 자신이 직접 챙기고 기간까지 하는 열성파로 소문나 있다. 지난 75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예산과 경제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재경원에서 경제협력·금융까지 실물과 금융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작년 1월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에 파견 나갔다가 지난 6월에 국민생활국의 책임자가 됐다.

吳東煥 물가정책과장은 흰칠한 외모에다 논리와 달변까지 갖췄다. 특히 국민생활국 주무과장답게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와 이론을 갖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공정위 제도개선과장, 재경원 복지생활과장, 세제실 기본법규과장, 재경부 유통복지과장, 생활물가과장 등 국민생활 관련 업무를 두루 거쳤다.

金東洙 생활물가과장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딱딱함과 경직된 인상이 전혀 없어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을 거쳐 물가정책국 조정과, 물가총괄과 등 근무에 이어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파견근무를 했으며 소비자정책과장을 지냈다.

姜炯旭 소비자정책과장은 조용한 성격에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탓인지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치밀하다. 재무부 국제기과, 증권정책

과, 국제금융과 등에서 일했고, 특히 영어실력이 뛰어나다는 게 주변의 평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에 근무하면서 대외협력창구 역할도 수행하였다. 99년초 친정인 재경부로 복귀한 이후 관세협력과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국민생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金龍煥 복지생활과장은 순수하고 어진 성격이어서 복지생활 업무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중산·서민층 지원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재무부 외환정책과, 증권정책과, 증권발행과 등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금융맨으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에 파견나갔다가 세무대학을 거쳐 재경부로 되돌아 왔다.

물가가 불안하면 국민경제도 불안해진다. 그런 점에서 물가안정과 소비자주권의 파수꾼인 국민생활국 직원들의 소임은 막중하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국민들이 물가걱정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글 · 윤근영/연합뉴스 경제부 기자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장식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정 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의약 분업 등 당면현안 해결을 뒷받침 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서는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 추경규모 및 재원, 추경 대상사업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 등 당면현안 해결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2년 반 동안 우리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7%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연간 8% 수준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실업률도 경기상승세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힘입어 5월 들어 서부터는 IMF 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다. 물가는 국제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1.5%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일부 불안 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등에 따라 자금시장과 주식시장도 전반

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가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도 6월말 현재 902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정운영면에서도 금년부터는 경제회복에 힘입어 건전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노력을 본격화하여 '경기회복과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4.4%로 떨어졌던 실업률이 금년 2월 5.3%까지 다시 높아져 동절기 고용사정이 악화되었고, 근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의 장기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 지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대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땀땀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안정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튼튼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두 번째 추경편성의 목적은 청소년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률은 금년 상반기중 11.2%로 청소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 실업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좌절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인력손실, 청소년 탈선 등 커다란 경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 자리를 제공하고, 정보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봄에 발생한 구제역·산불 대책의 마무리 소요를 지원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지난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간의 차액이 발생한 데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소요를 지원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실업대책,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등 긴요한 투자소요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세수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2조4천억원 책정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가운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추경규모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소요에만 한정하여 2조4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금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은 7.4%로 이는 지난 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상성장률보다 2%p 이상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가운데 국고에 추가로 납입한 1조5천억원과 세계잉여금(필자 註: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회계장부 마감시점(3월 10일) 이후 그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의약분업 등 당면현안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원은 지난해에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에서 사용하였다.

규모가 사실상 확정되면 세출예산 외로 국채상환에 활용하거나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입하여 긴요한 세출소요에 충당 가능하다] 2조4천억원 중 9천억원을 활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5천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경우 결국 작년에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총여유재원 6조4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이미 국채발행 축소에 사용한 2조5천억원까지 포함하면 4조원을 국채감축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4천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년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세수초과분은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기금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추경 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당초예산 -3.4%에서 -2~-2.5%수준으로 축소되도록 관리해 나감으로써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경 대상사업은 금년중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한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추경편성 목적 달성에 직결된 사업 중 금년중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7,538억원을 계상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 1백만

금년중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7,538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2,113억원,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3,102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소요 5,899억원 등을 계상하였다.

명 수준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2인가구 기준 월 5~15만원)하는 데 2,849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시·도별로 설립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억원을 지원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16만4천명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일요일까지 확대하고, 결식아동·재가노인 3만9천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녀 18만7천명에게 기존의 입학금·수업료에 추가하여 교과서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335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체불액 2,354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1,500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을 급격히 감축할 경우 아직도 민간부문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이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노숙자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 발생도 우려되어 상반기 고용인력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2,113억원을 계상하였다.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산업체 인턴 1만5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초중고 전산보조원 1만2천명을 고용하는 데 833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해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 50만명과 전역예정 군장병 27만5천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는 데 1,012억원을 책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장래 취업 유망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전문대학의 산업체와 연계한 주문식 직업교육 확충 등에 268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추경 대상사업

(단위 : 억원)

	추경예산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7,538	자활보호자 생계비(2,849), 공공근로사업(1,500)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500) 저소득층 학생중식 지원(156) 등
청소년 실업대책	2,113	학교정보화(430), 산업체 인턴채용 확대(390) 초중고 전산보조원 고용(269) 등
당면현안 지원	3,102	지역의보지원(2,302), 축산발전기금 보전(500)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300)
교부금 정산	11,145	지방재정교부금(5,899), 교육재정교부금(5,246)

셋째,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3,102억원을 계상하였다.

먼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료·조제료 등의 인상으로 지역의료보험에서 하반기중 추가 부담해야 할 급여소요 2,302억원을 반영하여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제역 대책 지원으로 자금운영이 어려운 축산발전기금에 500억원을 보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봄철 이전에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데 300억원을 책정하여 대형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의 훼손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99년 내국세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4조4,454억원 초과됨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소요 5,899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

산소요 5,246억원을 계상하였다.

적자재정하에서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라 빚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하면서도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화를 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으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꼭 지원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 선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청소년 실업대책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길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업무영역 규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국경을 장벽으로 수입이 억제될 때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나,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 대기업의 값싼 제품이 대량으로 밀려들어오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대 장치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부품의 조달 등에 있어 분업의 이점을 살려 대부분 하도급이나 계열기업의 형태로써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TV 등의 생산에 있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립업체인 대기업이 공존하는 경우나 아파트 건설시 대형 건설업체와 미장·도배·창틀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

업이 공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계열 중소기업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전체의 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모든 기업과 국경없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에서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같이 커나갈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위법·부당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 출처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편

투자신탁산업의 투명성 제고

—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



김재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jckim123@fss.or.kr)

투 자신탁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신탁상품 가입자의 보호 및 금융시장 선진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의 시행이 예고되었던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채권수익률 공시체계의 마련,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클린화, 부실자산의 공개,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의 개선 등 기반구축을 체계적으로 한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금융시장의 큰 혼란이 없이 채권시가평가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고 예상된다.

매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의 실질가치 평가

채권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주식처럼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채권은 회사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발행할 때 통상 정해진 원금(액면가)을 계약기간 만기에 돌려주고, 정해진 기간마다 미리 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채무증서이다. 따라서 채권 소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받게 될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으나,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 시중의 금리수준,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서 실제 받는 금액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채권만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채권형 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실적배당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帳簿價 평가방식에서는 채권취득시 취득원가를 장부상에 반영한 후 경과기관별로 정해진 이자금액만을 가산하므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저축상품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시장금리가 채권이자율보다 높으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장부가로 평가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다 보니, 이를 판매하는 투신사 및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채권시가평가는 기업의 신용상태, 시중의 금리변동 등에 따라 변하는 채권 가치를 매일 펀드의 수익률에 반영하므로 시장금리와 채권의 표면금리와의 차이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천만원이고, 표면금리가 10%, 만기가 3년인 채권으로만 구성된 채권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의 시장금리가 10%이고 거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이 채권형 수익증권을 1천만원에 구

입하게 된다. 만약 잠시후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시장금리가 12%로 상승하게 되었다면 이 수익증권의 가격은 950만원 정도로 평가가 되며, 반대로 8%가 되면 1,050만원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는 수익증권이라면 1천만원에 환매가 가능한 수익증권이라도, 시가로 평가되는 수익증권에서는 금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장부가 평가 방식에 비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표 1〉 참조).

고객간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등 기대돼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고객간의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투자신탁의 부실화 방지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 등에 있다.

채권은 계약기간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고 중간에 정해진 이자를 돌려주므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과거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로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가입해 있는 고객간에도 환매시점에 따라 실제가치보다 많이 또는 적게 받아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형평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채권시가평가가 활성화되면 정확하고 합리적

고객간의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투자신탁의
부실화 방지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만기 1년의
비과세 상품을 허용하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며, 자산운용회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인 시가평가를 위해 신용분석기법이 발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채권시장의 투명화를 가져와 채권매매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에 따른 가격정보의 공시체제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와 간접투자 상품인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부가 평가의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수익증권의 환매금액이 수익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많으며, 시장금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도환매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채권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하지 못한 채권이 늘어나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평가손 및 자금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채권의 시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활성화가 되면 각종 신용분석기법 및 신용정보가 투명하게 발표되기 때문에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를 촉진하게 되고 금리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표 1〉 시가평가펀드와 장부가 평가펀드의 수익률 비교

(단위 : %)

	시가평가펀드	장부가 평가펀드
채 권 형	8.03	7.94
혼합주식형	7.72	5.23
혼합채권형	6.37	6.10

註 : 한국펀드평가(주), 2000. 6. 16 기준

투신사의 기존 부실자산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일 없을 것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만으로 운영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도 환매시점에서 금리가 매입시점보다 급격히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투자원금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자의 리스크와 수익률의 상해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의사판단을 해야 하는 투자상품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채권을 실제 시장에 매각한 후 그 금액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3~4일이 소요된다.

투신사 측면에서 보면, 시가평가지 운용되는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해서 전액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차입금을 예방할 수 있고, 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사채형 상품도 시장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예상수익률 제시행위 등 변칙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판매방식도 단순한 저축권유에서 투자자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위축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익증권 판매채널의 다양화, 자산운용의 패턴 변화, 금리선물 등 선진운용기법의 적극적인 활용, 펀드운용의 투명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경쟁력 강화, 채권시가평가기관의 양성 등 관련산업의 발전도 예상된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채권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금리변동성이 축소되고, 장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즉, 채권유통 물량이 많아지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의 매도기관과 매수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한 호가체제제도보다 금리의 변동성은 훨씬 축소될 것이다.

아울러 채권의 최대 매수기관이었던 투자신탁회사 부실화의 주된 요인 중 미매각 수익증권과 부실채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악성채권의 누적에서 기인하는 금리의 불안전성이 해소되어 금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시가평가제도가 활성화되면 1년 만기 채권과 3년 만기 채권 위주의 발행시장에서 다양한 만기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지고, 장기회사채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유동성이 높아지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채권매매가 활성화되고, 유통시장의 투명화 및 유동성 증가로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채권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이 기존 투신사의 부실자산을 수익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신탁재산 클린화 작업을 추진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모든 펀드를 완전 클린화하였다. 즉, 신탁재산 중 부실자산을 투신사의 고유계정으로 이전시켜 CBO발행 등을 통해 정리하되 투신운용사와 판매사가 부실자산의 손실을 상당부분 부담하고, 아울러 부분적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 신탁계정내에서 부실자산을 자체 상각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제

도 때문에 투신사의 기존 부실자산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시중자금의 단기화

〈표 2〉 투자자 성향별 투자 대안

안정성	안정성 · 수익성	고수익성
· MMF(단기투자) · 단위형펀드(단기일치)	· 국공채 투자펀드 · 우량회사채 펀드 (신용등급별 편입)	· 하이일드, CBO 등 고수익률 시가평가 펀드 · 주식형 펀드

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주식·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과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기성자금의 일시적 증가와 채권 시가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투자자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감이 제고되면 즉시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된 7월 1일 이후 투신권의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가평가제의 실시로 신탁재산 운용이 보다 투명해지고 투자자의 재산보다 건전해질 것이므로 투자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여러 상품의 위험도와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표 2〉 참조).

앞으로 설정규모 100억원 이상 모든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는 물론 운용되는 유가증권의 수익률, 부실자산 및 그 상각률 등 개별펀드의 내역을 한국투자신탁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tca.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가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및 감독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채권시가평가의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1998년에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에 맞추어 구축토록 하였고, 1998년 11월에는 증권업협회에서 채권수익률 공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부실채권의 상각기준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1999년 6월에는 소규모 가공펀드를 정비하였고, 2000년 4월에는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하이일드·CBO·뉴하이일드 등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가평가제로의 이행을 촉진토록 하였다.

또한 시가평가에 따르는 불안감 때문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대량환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지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채권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금리변동성이 축소되고 장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만기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지고, 장기회사채
발행이 수월해지며, 채권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하기 위해 만기 1년의 비과세 일시납입 형태의 상품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조만간에 일정기간(예: 6개월) 도래시 혹은 일정한 수익률(예: 10% 이상) 달성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운용회사 등록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신탁 상품의 장단점과 시가평가제의 내용 홍보를 통해서 투자신탁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국채유통시장의 육성, 채권유통·발행 구조의 개선,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및 시장 인프라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전성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서기관

최 근 인터넷 이용자가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는 우리 생활 모든 부문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열매 뒤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이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종합대책 마련

자동 해킹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PC통신·인터넷·서적을 통하여 해킹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올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미국 주요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인

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중요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3월 발생한 멜리사 바이러스로 인하여 10만대 이상의 서버가 피해를 입었고 1개 州 업무가 마비된 바 있으며, 1999년 4월 발생한 CIH 바이러스의 경우 당시 국내에 보급된 800만대 PC 중 16~24만대(2~3%) 정도에 피해를 입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이나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안방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접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인터넷 정보 중 약 10% 정도가 음란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음란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유포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음란물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또한 개인의 성생활 등을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에 그치

지 않고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O양 비디오투 사건에서 우리는 인터넷 확산이 가져온 폐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는 호기심 차원의 시도에서 점차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매매춘, 사이버 성폭력이나 유언비어의 유포,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함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그 어느 경우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이미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및 사회전반의 건전한 윤리 확립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는 음란물 유통, 정보시스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통신비밀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인프라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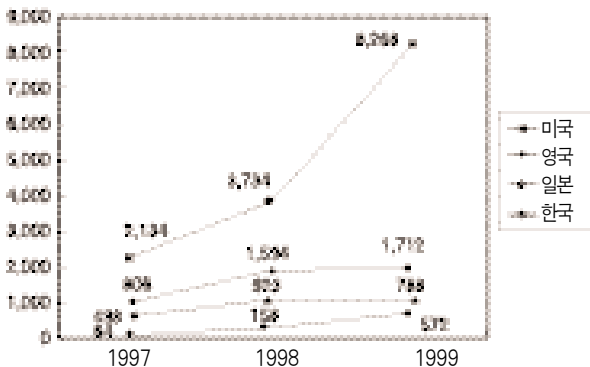
정보통신부에서는 신설된 정보보호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암호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를 위한 사이버테러 방지

99년 한해 동안 발생한 해킹사건은 572건으로 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 5월말 현재 604건에 이르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역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요 정보를

〈그림 1〉 해킹사건 증가 추이



자료 :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1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악성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 사이버 테러 방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해킹·바이러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는 118 상담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검·경 등과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필요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향후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 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사이버공간상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 국가 등 정보화 선진국과의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여 각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IDC시설·안전 신뢰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기준(안)

도 준비중이다.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제도 정착

99년 7월 「전자서명법」의 시행에 따라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아래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국가 전반의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공개키기반구조, NPKI)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제고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민원행정,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가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공인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인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 전자서명 인증 국제 워크숍' 개최 및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전자서명 이용이 활성화된 국가와 상호인증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무선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무선 인터넷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 PKI구축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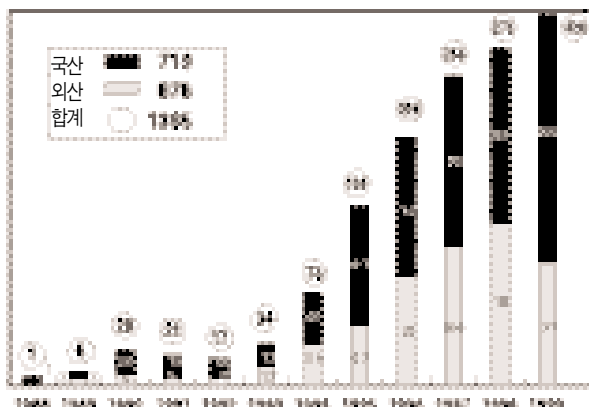
암호이용 활성화대책 추진

암호의 정당한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사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부당한 암호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암호이용촉진법」(가칭)제정을 추진중이며, 미국·영국 등 외국의 암호이용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중이다.

「암호이용촉진법」은 사용자의 신뢰성 있는 암호수단 선택 보장, 자율적인 암호장비 개발·생산, 암호키 관리, 암호기술 개발 및 암호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블록암호알고리즘 설계와 안전성 분석모델 개발 및 표

〈그림 2〉 연도별 바이러스 증가추이



준화를 통하여 국내 암호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암호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전자상거래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2000년 5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000년 4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기구 및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외에 일반기업의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인터넷사이트마크」 부여 제도를 추진중이며, 사이버아파트, 기업내 LAN시설 등 개인정보가 직접 관리되는 곳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AN관리자에게 시설운영기준의 마련을 권고하고, 동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둘째, 불건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정보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과 통신상의 불건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율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 육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자율적으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추진중이며,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인터넷 사이트를 발굴·추천하는 '이 달의 추천사이트'

정부는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인증제도의 정착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암호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보호기술 개발에 주력

선진국 수준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보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첫째,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다. 양질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교육원의 단기 정보보호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연간 4천명씩 배출하고, 국내 5개 대학에 정보보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며 5개 대학에 정보보호연구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여 연간 200명 정도의 고급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들의 자생적인 정보보호동아리 활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성 점검 기술 및 침입시도 탐지기술 개발, 침해대응 및 복

구기술 개발, 인터넷 서비스거부공격 대응기술 개발 등 사이버테러 기반기술 개발을 상반기중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자금 30억원으로 단기간에 상품화가 가능한 정보보호기술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것이며, 인터넷보안·전자서명·암호방식 등 정보보호 요소기술을 표준화하여 정보시스템간 호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할 것이다. 정보보호 중소·벤처업체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900평 규모의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센터'를 구축·운영할 것이다.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은 창업보육실 운영 및 창업절차 안내 등 창업활동 지원과 고가의 첨단 기술장비 및 개발제품의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기술관련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 6월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동 기반시설의 개소를 추진중이다.

넷째, 정보보호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정보보호 新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호컨설팅 및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안컨설팅업체의 컨설팅능력, 기술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의 취약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케 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한 각 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심사·평가하는 '정보보호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99년 12월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 개정(안)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 2월 평가기준 개정(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확대를 시

행할 계획인바, 침입차단시스템뿐만 아니라 스마트카드, 침입탐지시스템, 전자상거래 CA서버 등으로 평가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용 정보보호제품 평가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 평가기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평가기관 확대방안도 검토중이다. 향후 국제 정보보호기술 수준에 적합한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동평가기준(CC)기반의 상호 인정협정 가입의 타당성을 분석중이다.

여섯째, 전자화폐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2000년 5월 전자화폐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전자화폐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전자화폐 관련 기본 규격을 정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상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포럼은 전자화폐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 전자화폐의 실태와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전파하고, 해외 전자화폐 관련 기구 및 민간포럼 활동에 공동대응하며, 관련 정보를 포럼회원사와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화와 정보화 역기능은 빛과 그림자와 같다. 정보화 추진이라는 빛이 강할수록 정보화 역기능이라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화의 밝은 빛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은 바로 정보보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경주하여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에 대처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아·태 지역 관광의 도전과 기회

— 제1회 APEC 관광장관회의 개최



조현재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장
(hyunjae21@hanmail.net)

지난 97년말 이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경제위기하에서 관광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98년 11월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APEC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었다.

APEC 내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실무그룹회의(TWG ; Tourism Working Group)에 국한되어 고위급 및 각료급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야심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많은 회원국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아·태 지역의 21세기 관광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서울회의 개최

우리나라는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APEC 콰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APEC 역내 관광활성화 제안의 후속조치로서 APEC 관광장관회의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99년 2월과 5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 Meeting)에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어 99년 5월 멕시코 만잘리노에서 열린 제14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는 APEC 관광장관회의의 창설을 결의하고 제1회 대회를 2000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회 APEC 관광장관회의는 2000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APEC 21개 회원국의 장·차관, 고위관리 등 150여명과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회장, 아·태관광협회(PATA ;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회장 등 국제 민간관광기구 대표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회의(7.4~7.6)와 장관회의(7.6~7.7)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본회의에 앞서 7월 6일 경복궁 경회루에서는 관광장관 전원과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등이 참가하는 문화소개 회의인 "관광장관 리트리트" (Minister's Retreat)가 열리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6일 개회식 연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육성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광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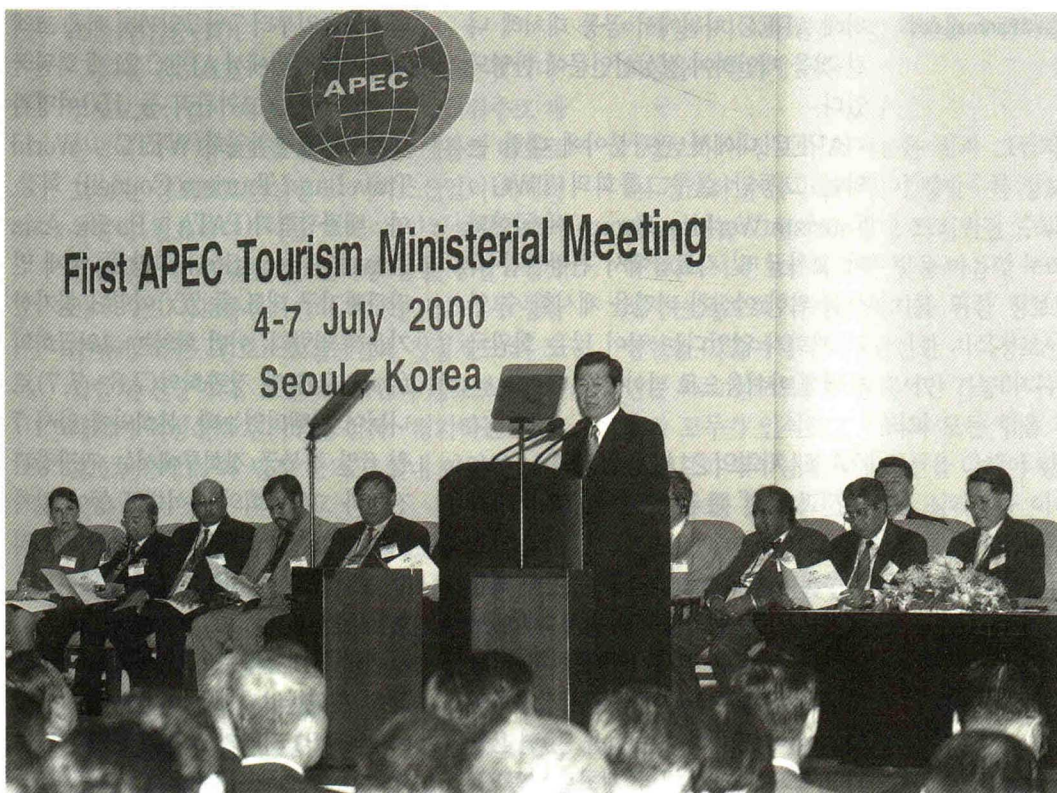
APEC 관광장관회의의 제1회 회의가 '아·태 지역의 21세기 관광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 민간관광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관광현장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성과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세계의 평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아·태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발전과 관광윤리를 존중하는 원칙

수립 그리고 APEC 회원국간 관광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가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APEC 관광장관회의의 주제는 '아·태 지역의 21세기 관광의 도전과 기회 (APEC Tourism 21/21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ourism in the Asia-Pacific Region)'로서, 이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APEC 21개 회원국들이 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APEC 회원국 관광장관들은 이러한 주제 아래 각 회원국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APEC 역내 관광산업 활성화 비전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APEC 관광현장 서울 선언문' 채택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의 최대 성과는 아·태 지역의 공존·공영을 위한 역내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APEC 관광현장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약칭 '서울선언문'으로 불리게 될 APEC 관광현장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홍콩·멕시코·브루나이 등이 참가하는 특별대책반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4월말 홍콩에서 개최된 APEC 관광포럼에서 민간 관광분야의 의견 수렴과 관광실무그룹회의의 토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서울 APEC 관광장관 회의에서 장관들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APEC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①아·태 지역 관광교류 및 투자 장애요인 제거 ②관광객 이동의 편의 제고 ③환경친화적 관광개발 ④관광을 통한 경제·사회적 복지 증진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APEC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동 이행일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선언문'은 또한 4대 정책 목표별로 정책팀을 구성하여 APEC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2002년부터 4대 정책목표의 주요 과제들을 대상으로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과 공동실행계획을 통해 '서울선언문'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해 나갈 성과사업(Programmes for Immediate Action : Deliverables)으로 ①지속가능한 관광 ②관광정보화 네트워크 ③관광위성계정을 채택하고, APEC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관광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APEC 역내 관광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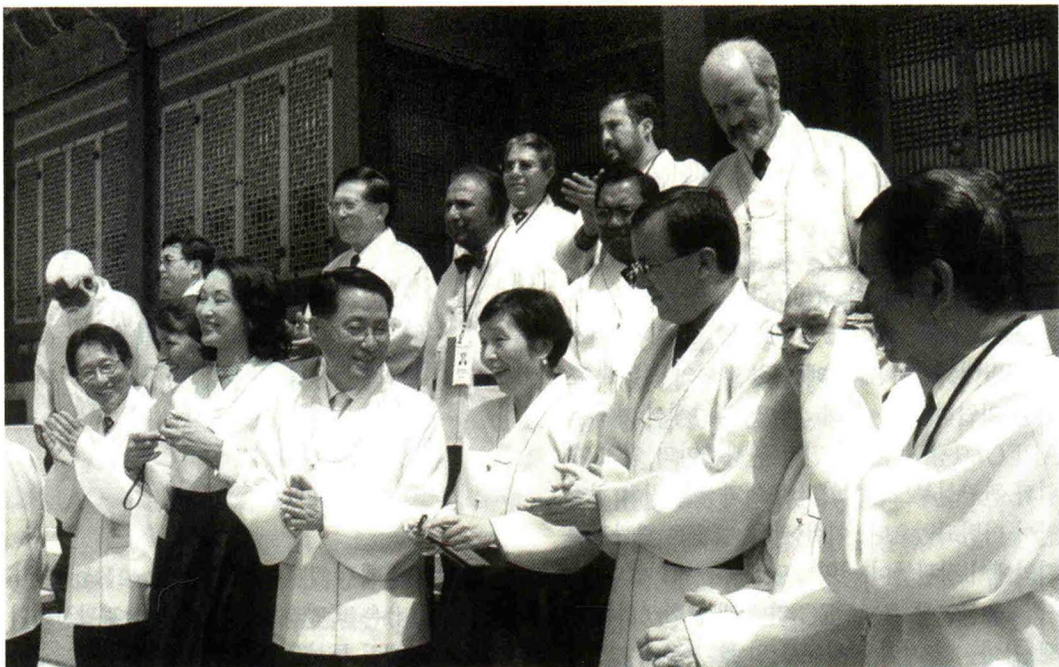
APEC 관광현장 서울 선언문은 관광교류 및 투자 장애요인 제거, 관광객 이동의 편의 제고,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관광을 통한 경제·사회적 복지 증진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개별·공동실행계획을 통해 그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s)은 국민경제 체제내에서 관광산업의 역할과 경제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체계적인 관광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사업체의 사업전략 수립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관광산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인 점을 감안하여 APEC 역내 회원국간의 관광정보를 공유하며 상호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관광정보화 네트워크사업의 추진도 이번 관광장관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와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 APEC은 국제기구로서 장관회의의 경우 민간대표의 회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경우 민간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PATA 회장, WTTC 회장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국제 민간 기구의 대표 등이 관광장관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였다.

관광장관들은 APEC 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이 갖는 창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마인드를 관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APEC 차원에서 민간분야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PEC 관광장관회의 통해 관광분야의 주도적 입지 확보

APEC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아·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PEC 역내 관광교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이행일정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회원국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성과사업도 채택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는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하여 열린 첫 관광분야 장관회의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APEC 역내의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관광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금년 10월의 ASEM정상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한국관광의 매력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의 기간중 '문화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한 문화소개 회의인 리트리트(Retreat)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이날 회원국 관광장관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참석하여 회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궁중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범, 국악공연, 민속박물관 옥외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관광장관회의를 통하여 얻은 성과를 지식과 정보, 문화창조력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우리의 관광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나가는 징검다리로서 삼고자 한다. **문경원**

수해방지 위한 종합대책 마련



김명국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장

최 근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해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42명의 인명과 6,200억원의 재산이 손실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로만 평균 8,8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6년, 98년, 99년 임진강 유역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치수대책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수해지역 주민들은 우기만 되면 홍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수해 발생요인 증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해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형 및 기상 특성상 수해에 취약하다.

우리의 평균강수량은 1,274 mm로 세계평균인 973mm보다 많으며, 특히 우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내리고 있다. 지형특성상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짧은 시간내 많은 양의 빗물이 하

류로 흘러내려 다른 나라에 비해 치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엘니뇨·라니냐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국지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단 4일만에 우리나라 평균강수량의 50%에서 75%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바 있다. 이는 확률적으로는 5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

둘째,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수해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하천변 저지대에까지 주택과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었으며, 도시내 포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녹지 및 농지의 감소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수해발생 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타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하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수해를 방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 지역에 내린 비는 하천을 통해 빠른 시간내 바다로 흘러보내야 하며, 하천에 흐르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방을 쌓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총 3,964개의 하천이

정부는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수해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천정비사업 등 홍수 방어시설 능력을 강화하며, 홍수 예·경보시설의 확충과 함께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검토한 후 99년 12월 12개 부처 합동으로 수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수해 발생요인을 최소화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해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다.

수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 등 도시적 용지 확대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빗물저장 능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운동장·공원 등이 유수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함은 물론 주차장·도로 등에 인공적인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해요인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둘째, 홍수 방어시설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는 하천제방과 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 하천제방은 홍수시 하천에 흐르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율은 67%에 불과하므로 하천 정비를 빠른 시일내 완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전액 국고로 일괄 정비하는 수계치수사업을

있으며, 하천의 길이는 3만416km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도로·항만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하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율은 67%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수해에 무방비 상태인 하천이 33%나 된다.

특히, 국가하천은 대부분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전체 하천 연장의 86%)을 차지하는 지방2급하천의 정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9월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수해발생 원인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을 전면 재

〈표〉 우리나라 하천 정비율 현황(99년말)

(단위 : 개, km, %)

	하천의 수	하천 연장	하천 정비율	관리기관
국가하천	62	2,858	98	건설교통부
지방1급하천	55	1,319	86	시·도
지방2급하천	3,847	26,238	63	시·도
계	3,964	30,416	67	

확대하여 총사업비 2조7,706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주요 13대 강에 대한 수계치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가 빈발하는 지방하천 2,461km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조6,517억원을 지원하여 하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홍수시 하천흐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건설된 지 오래된 제방에 대해서는 최근의 강우패턴을 고려하여 안전도를 재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하천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

하천제방은 하천에 흐르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편, 댐은 홍수시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을 비롯하여 농업용댐, 생활 및 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다양한 종류의 댐이 있으나 이 중 홍수조절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댐뿐이며, 10개의 다목적댐에서 25억톤의 홍수를 조절하고 있다.

다목적댐이 홍수조절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지난 98년 대홍수시 한강유역에 있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홍수조절로 한강 인도교 수위가 2.6m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댐건설에 따른 수몰주민들의 주거 기반 상실 및 생태계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댐의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발전용댐에 홍수조절능력 및 용수공급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전용댐의 다목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의 연계운영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홍수 예·경보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이나 댐과 같은 홍수방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더

빠른 시간내 위기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는 기능이 필요하다.

홍수 예·경보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강 등 5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강우량·수위·유량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예측모델을 개발한 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매 시간마다 무인관측시설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은 후 홍수예측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주요지점의 수위와 홍수량을 예측하고 일정기준 이상으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홍수 예·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대규모 하천에만 무인관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2002년까지 이를 도시하천 및 중소규모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임진강 유역에는 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임진강 상류의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예·경보 체제를 7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수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수산물 수출진흥으로 무역수지 흑자 실현



박종국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장

97 년 FAO 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무역시장은 수출 513억 7,600만달러, 수입 562억2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이 1천억달러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국가별 수출은 노르웨이가 33억9,900만달러로 세계 1위의 수출국이고, 중국은 29억3,700만달러로 2위, 미국은 28억5천만달러로 3위, 우리나라는 13억7,600만달러로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입의 경우, 일본이 155억4천만달러로 1위의 수입국이며, 미국은 81억3,900만달러로 2위, 우리나라는 10억1,800만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여건 취약하고 시장편중 현상 보여

우리 수산물의 수출입 구조 및 여건은 한마디로 호조건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우선 수출측면에서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지난 83년 366만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280만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EEZ 선포 등 국제해양질서의 재편, 연안국의 자국화 정책과 조업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어업의 생산성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

라서 수출용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수산물 수출 대상국가는 지난해 92개국으로 80년대 50여개국에 비해 대폭 늘었으나, 일본이 전체수출의 76%를 점함으로써 대일 의존도가 높고 시장의 편중현상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출품목의 경우도 활선어와 원양어획물 등 1차 가공품 수출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국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일본의 수입할당제도(IQ) 운용(9개 어종 및 김)으로 인한 수입제한, EU의 수출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제도 시행, 미국의 HACCP 적용과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수산물 수출여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수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 수산물 수입 대상국가는 72개국이었으며,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35%, 러시아 17%, 미국 11%로서 이들 3개 국가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억3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산물은 91년도 이후 연평균 40%의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96년 이후 제1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수산물은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라 횡감용 활어, 소비성

향의 고급화로 인한 새우·바닷가재 등 고급어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무역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 APEC에서의 조기자유화 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공통된 성격은 수산물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통한 교역확대로서 그 결과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감소세

수산물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4~5%대에서 최근에는 1% 수준을 점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은 80년대 수입개방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97년 전면 자유화 이후에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는 88년 1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수출은 97년 14억 9,300만달러에 비해 98년에는 13억6,900만달러로 감소하였고, 99년에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15억2,1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97년 10억4,600만달러에서 98년에는 5억 8,800만달러로 급감하였고, 99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98년 대비 100%, 97년 대비 13%나 증가한 11억7,9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산물 무역흑자는 97년 4억4,700만달러에서 98년에는 7억8,10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나 99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EEZ선포,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국내 어업생산성 감소, 전체 수출의 76%를 일본이 점하고 있는 대일 의존적 수출구조, 97년 전면자유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수입의 증대, 수산물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환경 속에서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에는 3억4,200만달러를 기록, 97년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은 일부 어종의 어획호조와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물량은 98년 약 60만톤에서 99년에는 약 48만톤으로 약 20%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11%가 증가함으로써 수출단가의 상승 및 고가품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수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출을 주도하였으나, EU·중국 등에 대한 수출은 42%, 40%씩 각각 감소하였다.

제품별로는 냉동품의 수출이 약 6억8천만달러로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선냉장품이 2억7천만달러로 17.5%, 활어는 약 1억달러로 6.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품

〈표 1〉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 천t, 백만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9년		476	1,521	746	1,179	342
1998년		590	1,369	375	588	781
1997년		509	1,493	522	1,046	447
증감률	99년/98년	-19	11	99	100	-56
	99년/97년	-6	2	43	13	-23

별 수출 증가폭은 활어 44.4%, 신선냉장품 8%, 냉동품 12%로 각각 나타났으며, 훈제품·건조식품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종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활넙치 48%, 굴이 29%, 고등어가 119%로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굴과 활넙치의 대일 수출증가는 대일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제정 및 일본과의 협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노력이 뒷받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했던 98년에 비해 약 100% 정도 증가하여 IMF 이전의 수입수준을 상회하였다. 수입물량은 98년 38만톤에서 99년 75만톤으로 약 97%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98년 약 6억달러에서 99년 약 12억달러로 100%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8년 약 2억달러에서 99년 4억달러로 100%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93%, 미국 54%, 일본 184%, 태국 74%, 베트남 245%, 인도네시아 45%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제품별로는 전체 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품의 경우 99년 8억6천만달러로 98년에 비해 99% 증가하였으며, 주로 핏감용으로 수입되는 활어는 7천만달러(전체의 약 6%)로 전체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99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247%나 급증하였고,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서도 70%나 증가하였다.

주요 어종별로는 냉동명란(134%)과 냉동조기(151%), 냉동명태(251%), 냉동명태필렛(549%), 조미 오징어(279%), 신선갈치(225%), 활뱀장어(1,431%) 등이 전년대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와 갈치의 경우, 대중성 어종으로 국내산의 어획부진 및 소

〈표 2〉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 t, 천달러, %)

		1998년(A)		1999년(B)		대비(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일	본	225,609	895,512	205,700	1,155,211	91.2	129.0
E	U	75,906	146,047	41,859	84,579	55.1	57.9
미	국	20,099	62,573	23,469	76,386	116.8	122.1
중	국	138,242	97,041	53,100	58,854	38.4	60.6
태	국	54,002	34,421	48,860	28,871	90.5	83.9

〈표 3〉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t, 천달러, %)

		1998년(A)		1999년(B)		대비(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중	국	110,677	197,120	295,713	413,270	267.2	209.7
러	시	92,147	106,178	129,402	205,033	140.4	193.1
미	국	59,237	83,977	77,361	129,816	130.6	154.6
일	본	18,482	37,637	52,085	107,206	281.8	284.8
태	국	7,471	24,925	11,786	43,523	157.8	174.6
베	트	7,671	11,446	20,819	39,549	271.4	345.5
인	도	11,109	15,789	14,820	22,962	133.4	145.4

비증가에 따라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며, 명태는 연안산 어획이 저조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산 활뱀장어와 활미꾸라지·활붕어·활잉어 등 내수면 어류의 수입이 내수시장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산물물은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의 수출입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기반 구축,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제도 개선,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입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등 각종 수입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WTO 뉴라운드 출범, APEC의 조기자유화 논의, FTA, 중국의 WTO 가입 등 국제적인 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우선, 우리나라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없는 고등어·오징어·명태·김·간미역 등의 수산물물은 수출용으로 전환하고, 수출용 원자재 구입을 위해 농안기금을 활용 저금리(연 5%)로 업체에 융자지원(2000년 635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과 수출의 연계를 통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넙치와 은어·피조개·굴·김 등 집약생산이 가능한 수출유망 양식품종의 집약생산지역을 수출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둘째,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홍보를 위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기반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증대하는 한편, 관세제도
개선, 수입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입관리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여건
및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처, 우리 국익과
어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의 상설 종합전시관 개설을 통하여 외국 바이어 또는 관광객에게 상담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우수 수출업체를 선발하여 해외시장에 파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시장개척 능력을 함양하고, 수출유망상품의 해외 직접판매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 및 수출교두보 확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수출유망 수산물의 해외인지도 확산을 위해 김포 등 국제공항에 김 제품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외 현지광고 확대 등 해외시장에 우리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수산물 수출업체에 폭넓은 해외시장 접촉기회를 부여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하여 교역장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주 수출국인 일본시장 확대를 위하여 매년 2회 양국간 교역실무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회담을 통해 김의 IQ를 연간 120만속에서 2001년에는 200만속으로, 9개 어종의 IQ도 2000년 4천만달러에서 2001년 5천만달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관페리를 이용한 임시 수출입 특수차량의 통관을 일본측

과 협의하여 활선어, 냉동·냉장 차량의 일본내 임시운항으로 신속한 수출품의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용 가공처리 복어대상 품종의 확대, 대일 수출용 어패류의 위생검사 완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중간에도 교역실무회담 정례화를 중국측에 제안하여 양국 교역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출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일 수출 위생관리 품종에 대한 현실실태도 수시로 파악하고 우리 수출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실태를 분석하며,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부대적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수출 진흥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수입관리를 효율화

수산물의 수입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수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관세제도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생산어업인 및 산업기반을 보호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체계도 수산물의 특성에 맞게 개편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품목은 활돔·냉동민어 등 14개 품목이며, 특히 금년 1월부터는 저가·저질 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에는 처음으로 종가세 방식에 종량세를 가미한 '종가·종량선택세' 방식을 활뱀장어·활미꾸라지 등 7개 품목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조정관세 품목 중 세율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관세화하는 등 기본관세 제도의 조정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검사·검역제도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수출수산물과 수입수산물, 신선냉장 및 단순가공품과 고차가공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검사 근거법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물 검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99년 9월 6일 이후 활뱀장어에 대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검사를 실시하고,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 5월 이후부터는 검사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중금속 검사기준을 종전의 총량개념에서 개별 중금속별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냉동어패류에 대한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의 변경 등 수입수산물의 검사 강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가공공장을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산 봉어·잉어 등 내수면 어종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질병유포 방지를 위해 낚시터에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식승인을 받도록 수산자원보호령 등을 개정하고 있다.

넷째,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민간 모니터링 참가 유도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을 소비자 스스로 찾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WTO 뉴라운드 출범 논의에서는 일본·EU 등 입장 동조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생산 어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인터넷 情報家電 산업 육성



임종태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장

최 근 들어 각종 신문지상이나 잡지 등에서 인터넷 정보가전(IA: Internet Appliances), 포스트 PC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에 서는 홈네트워킹, 정보가전 관련 신기술들이 어김없이 발표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 PC의 보급 확대 그리고 TV를 포함한 모든 가전제품들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 효율을 대폭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정보가전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제품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유·무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나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TV, 인터넷 냉장고, DVD, 디지털 비디오, 인터넷 가스레인지, 인터넷 홈시큐리티 등과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가전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은 기존의 가전제품에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보단말기와 관련 소

프트웨어, 응용 및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포함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위해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 육성 필요

인터넷 정보가전이 나타나게 된 주요 요인은 우선 인터넷과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가정내의 모든 사람과 기기에 유통시키기를 원하는 사용자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케이블 모뎀, DSL(디지털 가입자회선), 심지어 직접 위성방송 등을 통한 광대역 접속 서비스가 한층 일반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가정내의 모든 기기에 전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홈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터넷 정보가전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내에서의 각종 기기들의 디지털화와 함께 정보가전기기의 보유율이 증가하고, PC 이외에 PDA(휴대용 정보단말기),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다양한 정보기기가 등장한 것도 인터넷 정보가전이 등장한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C를 다룰 수 없는 국민계층도 외부 인터넷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시대의 심각한 역작용인 디지털분단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가전
기술기반 구축 및 2005년 세계 2대
정보가전 대국 달성을 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기반 육성 정책,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요기반 육성 정책,
환경 및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표준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igital device)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터넷 정보가전의 출현을 재촉하는 주요 배경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세계 정보가전 산업의 규모는 2005년 약 3,600억달러, 국내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향배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통신망 고도화, 디지털 방송, 이동통신, IMT 2000 등 핵심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네트워크 개념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에게까지 확대·도입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가정내의 정보기반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의 육성도 범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여 국가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은 크게 네트워크, 단말 및 소프트웨어, 응용 및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 분야는 가정과 외부망(케이블, ISDN, ADSL 등)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능과 가정내의 다양한 기기를 유·무선으로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홈 네트워크)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홈 네트워크는 가정에서 디지털 정보가전과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여 데이터 송수

신, 멀티미디어 정보교환, 각종 기기의 제어기능 등을 제공한다. 홈 네트워크는 전화선·전력선·광화이버 등의 유선과 RF(무선 주파수)·적외선 등의 무선으로 구분된다.

정보가전 단말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차세대 가전제품으로서 에듀테인먼트 기기, 일상생활 기기, 사무용 기기, 휴대 정보단말기 등으로 구분되며, 디지털TV·오디오시스템·인터넷냉장고·가스레인지·지능형에어컨·건강체크양변기·보안시스템·프린터·팩스·휴대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정보가전을 제어하고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용기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된다. 응용 및 서비스는 인터넷과 가전이 융합되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에듀테인먼트 서비스, 사이버 홈 서비스, 사이버 오피스 서비스, 이동정보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홈 쇼핑·홈 오토메이션·원격건강검진·채택근무·영상회의·개인정보서비스·원격 가전제어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가전 기술기반 구축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가전 기술기반 구축 및 2005년 세계 2대 정보가전 대국 달성을 위하여 먼저 민간주도의 산업 활성화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터넷 정보가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정부부처간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한 산업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기반 육성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인터넷정보가전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000. 3. 30)하고, 전문인력기술자격증제도 운영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디지털 방송의 연계 추진과 통합 콘텐츠 기술개발 추진을 통한 정보가전 콘텐츠 및 서비스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요기반 육성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보가전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하여 모델 하우스 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수요확대와 서비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국민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환경 및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가전을 위한 기술적 환경정비를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현재 IPv4로 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체계를 IPv6 체계로 전환하여 가정내의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요구하는 IP(정보제공자)의 부족 상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고,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기준과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방안 수립과 정보가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정보가전 확대를 위한 환경 및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네트워크 부문, 단말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주요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2004년까지 정부에서 1,570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협

동으로 운영될 인터넷 정보가전 표준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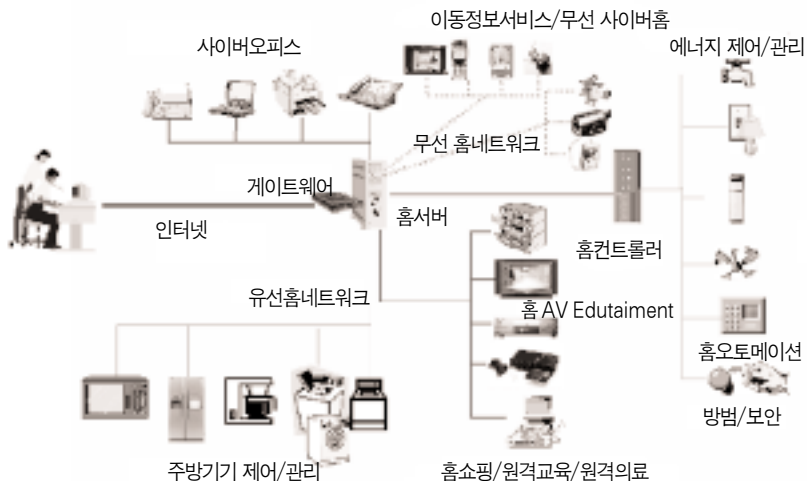
정부는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육성을 통하여 다음 몇 가지의 정책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이 공공부문(의료, 복지, 환경 등)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주부·노년층·장애자들에게는 쉽고 편리한 정보가전의 출현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을 더욱 촉진시켜 이중 업체(가전·통신·방송·건설·서비스 등) 간 공조체제 확립을 통한 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보가전 산업육성으로 유발되는 신산업의 규모는 2004년 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인력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한 산업의 규모 확대와 고용증대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인터넷 정보가전기 구성도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적극 추진



이신재
노동부 자격지원과장

2 세기는 세계화 · 디지털화 · 지식 경제의 시대이다.

중전에는 ‘자본 · 노동 · 토지’라는 유형자원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금세기에는 ‘지식 · 정보 · 문화’의 무형자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가 되고 있다. 국가간 벽을 낮추고 경제활동의 무국경시대를 열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모든 기업들이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지식근로자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모든 근로자의 지식근로자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1천2백만 근로자를 ‘지식근로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임시 · 일용직 근로자가 53%에 달하며 이러한 고용불안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은 부단한 자기계발로 자기라는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함에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명서가 바로 ‘자격’이다.

자격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의 제도화와 구체적인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작년 9월 사업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이어 11월 노 · 사 · 정 조찬간담회에서 기본방향을 논의한 뒤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지난 1월 2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1일에는 산업인력공단이 각각 지방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인력과 기구 구성을 마쳤다.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근로자는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격취득에 필요한 재료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수당의 지급 · 승급시 우대 등 적당한 대우를 해 주는 등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 협력할 수 있는 실천수

단이라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43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원스톱 검정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사업 신청 사업장에 자격검정팀이 방문하여 시험을 치르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시에 검정응시 근로자의 검정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원스톱 검정이란 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의 실시와 자격증 교부 등 검정서비스 일체를 지원하는 검정시스템이다.

이때의 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워드프로세서 등 3개 종목이 포함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사·기능장을 제외한 43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휴가나 비번일 때를 이용해 검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일소하는 효과가 있다.

참여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4개 지방사무소와 대한상공회의소 62개 지방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가 2개 이상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재비와 수강료를 10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2자격 갖기 신청사업장 근로자로서 3개 종목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속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해 기업내에서만 통용되는 사내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 자격검정개발비로 최고 1,200만원(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사업장 1,500만원까지)과 운영비를 3년에 걸쳐 매년 1천만원(우선지원대상 1,200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근로자의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모델이다.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부수효과도 있고, 개인의 발전이 조직과 회사의 도약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것이다.

만원까지)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자들은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산업, 영상산업 등 급부상하는 분야에 맞는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멀티미디어전문가, 게임디자인전문가, 메카트로닉스기능사 등 신규개발자격 19개 종목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근로자의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모델이다.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부수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개인의 발전이 조직과 회사의 도약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신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전망(I)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주회사(stock holding company)는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자기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전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 후자는 생산·판매 등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결국,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범위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의 주식으로 보유하면서 일부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굴지의 대기업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이 아닌 까닭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또한 뮤추얼펀드와 같이 자산전체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있으나, 동일종목 10% 투자제한 등 관련법령의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역시 지주회사가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시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이든 금융지주회사이든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지주회사의 장·단점

지주회사는 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

먼저, 지주회사가 가진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지주회사방식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분리함으로써 환

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99년 1월 1개의 지주회사와 9개의 자회사로 재편한 일본 다이와증권의 사례를 보자(〈그림 1〉 참조). 다이와증권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동기는 “살벌한 금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경영의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재 및 자본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하라 요시나리 대화증권 사장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대화증권은 고객을 기준으로 개인영업, 법인영업, 투자신탁 등의 자회사로 재편하면서 개인영업 부문에는 스미토모은행의 금융과 생상품 부문과 스미토모증권을 합쳐 대형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주회사는 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회사내 다수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자회사로 만들고 기존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이 용이하다. 또한 이런 구조 아래서는 위험이 높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뛰어 들기도 쉽다. 왜냐하면 설사 자회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해당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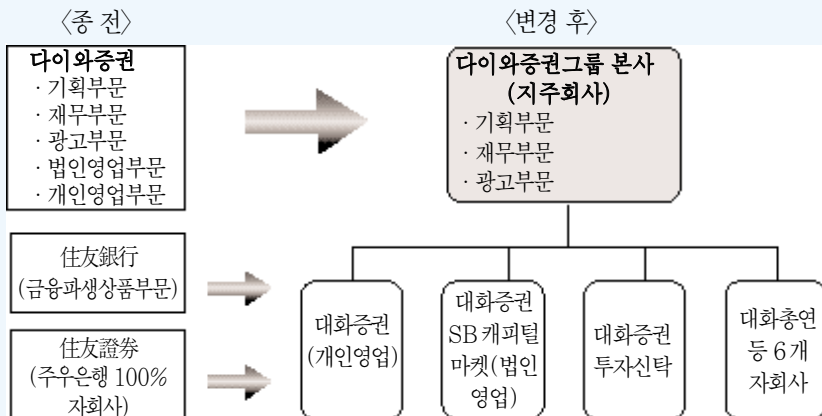
만 퇴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량한 국내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우발채무 등 우리 기업의 낮은 회계투명성이 늘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그림 2〉의 A,B,C,D와 같은 개별 기업에 외자를 유치하기보다 동일인·주력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A,B,C,D)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깨끗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외국인의 현금출자를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지주회사 1개에 출자하는 것이 다수 개별기업에 출자하여 일일이 임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물론이다.

셋째, 지주회사 체제는 1개 회사내의 다수 사업부방식보다 사업부문간 독립성이 높아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할 수 있고, 수익성에 따라 자회사별 인사·노무관리의 차등화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지주회사는 M&A기법의 하나인 합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인사·보수

〈그림 1〉 다이와증권의 지주회사 전환



체계·분권화 정도 등 기업문화가 상이한 회사간의 합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융화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 경우 합병대상회사들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게 되면 경영자원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어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 초래할 우려 커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단점을 알아보자. 이는 바로 99년 이전까지 지주회사를 금지한 이유가 된다. 지주회사는 한마디로 계열기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유리한 기업의 조직방법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지분율을 50%라고 가정한다면, 50억원을 가진 사람은 자본금 100억원짜리 회사 1개를 지배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자본금 100억원인 지주회사를 세우고 부채를 자기자본대비 200%로 조달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산 300억원(자본금 100억원, 부채 200억원)짜리 회사 6개를 지배할 수 있다. 중간지주회사를 활용하면 그 범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단순화된 예이지만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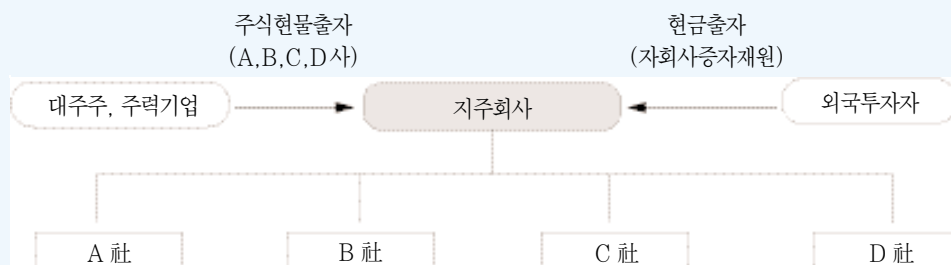
외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자.

먼저, 1945년 8월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는 가장 먼저 재벌의 해체에 착수하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집중은 저임금과 이윤의 집적을 초래했고, 이는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만들어 상품수출의 중요성을 높여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한 에드워드 보고서가 그 답변이 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주요 재벌은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본사, 즉 지주회사 아래 수백 개의 사업회사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피라미드형태를 이루면서 군수산업·무역업 등 산업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연합군총사령부는 재벌해체를 위해 지주회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미쓰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4대 재벌을 포함해 83개의 지주회사를 지정·해체하였다. 대표적인 종합상사였던 미쓰이물산과 미쯔비시상사는 1947년 각각 223개, 139개의 회사로 철저히 분할·분해되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전력 및 가스산업을 소수기업이 지배하고 있었다. J.P. Morgan이 소유한 United Corporations 등 3대 그룹이 전력산업의 49%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소수지배의 수단으로는 지주회사가 이용되었다. Associated Gas &

〈그림 2〉 지주회사를 활용한 외자유치



Electric System의 경우, 지배주주는 30만달러만 지주회사에 출자하여 장부가치 10억달러인 전기·가스회사를 지배하였다. 주로 지주회사가 부채를 조달하여 지배범위를 넓혀갔다. 대공황에 접어들어 자회사의 수익이 감소하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53개 지주회사 그룹이 파산하였다. 물론 최대 피해자는 전기·가스를 날마다 사용하는 소비자였다.

이에 미국정부는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공익사업은 하나의 주에서만 영위토록 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까지만 소유하며 손회사는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를 강력히 규제하였다. 그 결과 1938년 214개였던 지주회사는 1982년에는 12개로 축소되었다.

3.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배경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에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98년 4월 ASEM정상회의 이후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틀을 만드는 작업의 하나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커졌다. OECD, IBRD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렇다면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어떤 규제를 두어야 하는가? 지주회사는 기업조직방식의 하나로써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에서는 거의 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보자. 외국인투자자들이 지적하듯이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계열사들은 상호채무보증과 상호출자로 거미줄같이 얽혀 있으며, 재벌오너는 소수지분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는데, 금융기관은 이러한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도 수익성과 위험에 기초한 여신심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사회·감사 등 기업내부의 경영감시기구도 허수아비였다. 그 결과는 대기업의 무모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과잉투자, 연쇄도산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경제위기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결합채무제표 도입,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차단,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한다면 지주회사가 기업의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오히려 더디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전면 허용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장치가 정착되어 시장의 힘에 의해 지주회사의 폐해가 시정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조시용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였던 우리 중소기업은 품질수준 향상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40~50% 수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업종 및 생산품목의 다양성, 중소기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면이 있으며, 시계열적인 통계비교도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설문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99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서는 65~70%, 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40~5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본 및 대만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10% 우위,

63% 열세, 대만에 비해서는 60% 우위, 9% 열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기계, 화학, 금속·비금속 및 자동차부품 등 5대 주요업종에 있어서는 일본에 모두 열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국내 대기업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저조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투자의 성공여부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실패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술개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수요에 비하여 너무 부족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청의 대표적 지원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의 경우 기업수요의 30~40% 수준

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취약한 재무구조 및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이다.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334%로 경쟁국인 대만의 86%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대기업의 20%에 불과하여 99년까지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이 14%에 달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활동 미흡을 들 수 있다. 기술개발 인력 및 기자재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나, 중소기업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기술개발 투자의 73% 수준을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80% 상당 인원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기술개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부족,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평가·거래에 관한 제도의 미정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다.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구축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와 같이 낮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① 기술력향상 기반구축사업 ②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③ 개발기술의 거래·이전 활성화사업 ④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기반구축사업

기술력향상 기반구축사업으로는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기술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및 중소기업들에게 중장기 기술정책 목표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

상 5개년계획」 수립 작업을 9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18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KOSBIR)’을 추진하고 있다. 99년도에 각 기관의 R&D 예산의 4%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3,51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R&D 예산의 5% 이상으로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약 4,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수요 및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과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성장유망기술, 전략부품·소재 개발기술 및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연구기관과 관련단체·업체 등과 설문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수단을 집중, 동종업계를 선도해 나갈 국제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사업’을 98년부터 추진중이다. 98년도에 423개업체, 99년도에 279개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6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심의·평가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기술개발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 있다. 99년도에 450억원의 예산으로 845개 업체, 2000년도에는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천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을 현지에서 해결토록 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99년도에 130억원의 예산으로 16개 컨소시엄, 1,474개 업체의 1,420여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는 210억원의 예산으로 146개 컨소시엄, 2천여개 업체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기술의 거래·이전 활성화사업

대학 및 교수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보급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9개 대학에 '기술이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이를 20여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소'와 한국테크

노마트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들 기관을 통한 기술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이스라엘 등 해외 선진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사업을 독일·러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생산현장의 기술지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대학교수와 학생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경영·디자인·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해결하는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지정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99년도 37개 대학 지정에 이어 금년도에는 77개 대학으로 확대·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 문제점 발굴 및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9년도 100개 업체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이를 300여개 업체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증소요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하는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9년도에는 58억원의 예산으로 46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4억원의 예산으로 80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완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싱글PPM 품질혁신운동' 및 기업중 업체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중 교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영상으로 경북이 좁아졌습니다”

김장주

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

지난 6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우수 혁신사례로 보고된 경상북도의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경상북도는 첨단 행정시스템을 도입,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과학기술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편집자>

‘원

격영상회의시스템’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1 : 1 또는 1 : 다자간 쌍방향으로 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상북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모여서 회의하는 문화를 바꾸고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2000년 정부(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공동주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는 면적이 1만9,023km²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과 영양·봉화·울진 등 원거리 산간오지가 많은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는 물론 도와 시·군간에 이루어지는 업무협업의 등 행정처리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 도와 시·군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에 울릉군의 경우 1~2시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4일간의 출장이 필요하고, 타 시·군도 1~2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큰 상태이다.

96년의 경우 도와 주관한 각종 회의·교육 등이 연간 230회로 시·군 공무원의 출장비 8억여원과 출장에 따른 행정공백에 17만여 시간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이에 경상북도는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21세기 지역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 신경북 비전」을 수립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행정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먼저 96년 10월부터 97년 7월까지 10개월간 국

비 4억2,100만원과 지방비 1억900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와 울릉군을 비롯해 청송·영양 등 원거리 7개군을 초고속국가망(T1 급: 1.544Mbps)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97년 8월 26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종 회의시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 7개군은 해당 군의 영상회의실로, 나머지 시·군은 도청의 영상회의실에 모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영상회의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전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 확대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8억4천만원(도비 2억6천만원, 시·군비 5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6개월간 나머지 16개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설치하였다. 이는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사례 중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사이트를 연결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경상북도의 영상회의시스템은 룸형이며, 설치된 장비는 자료전송을 지원하는 CODEC과 다자간 회의를 지원하는 MCU, 70"대형모니터, 3CCD 또는 1CCD 카메라, 영상신호를 제어하는CCU, 실물자료 영상전송을 위한 Data Viewer, 회의진행상황 녹화 및 비디오자료 방영을 위한 VTR, 카메라시스템을 제어하는 Touch Panel 등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과 같다.

이 시스템은 도와 시·군간, 시·군과 시·군간의 1:1 또는 1:다자간 회의에 신축성 있게 연결이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 뷰어를 이용한 실물자료영상 전송기능, 행사장면과 방송 등을 중계하는 기능, 음성 인식에 의한 회의 자동전환기능, 회의내용 녹화 및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회의 및 지시 사항 전달은 물론 영상을 활용한 직소민원 해결,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지휘, 원격교육, 타 영상시스

템과의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초기부터 그간 실패사례를 들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며, 시스템 설치 후에도 회의는 모여서 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기존관행과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고,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영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설치 후 1년간 24회밖에 사용되지 않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활용하지 않으면 행정력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회의, 직소민원 해결, 재해·재난 지휘, 원격 교육 등에 적극 활용

영상회의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기관장인 이의근 지사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사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지사 주재 도간부회의에 시·군의 간부들을 영상회의로 참여시켜 도정운영 방향이나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시·군의 당면사항이나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와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 활용하였다. 특히 도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도민들에게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정의 중요현황을 홍보하는 등 영상회의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숭선수범을 보였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도청의 각 실과에서 시·군 공무원을 소집해서 하던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을 영상회의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에 따른 출장을 강

력히 통제하였다.

매년 부서별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서별 인센티브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에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을 반영하였으며, 분기별 활용실적을 간부회의시 공개하여 이용활성화를 촉구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연평균 33회였던 활용률이 2000년 6월 현재 40회로(연말까지 80~90회 예상) 활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금년을 기점으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의 80% 이상이 영상회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 후 거둔 성과로는, 먼저 직접적인 성과로 97년 시스템 설치 후 현재까지 140회의 활용실적을 보여 여기에 소요된 출장비 6억원의 예산절감과 출장으로 인해 낭비되는 9만여 근무시간이 절약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는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 및 복잡한 회의준비 등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시켜 영상회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였다

그리고 영상회의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범위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그 영역을 넓혀 왔다. 그간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현안사항 수렴 및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영상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영상민원실 운영과 이해관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행정심판 등에 활용하였다.

둘째, 연초에 전국을 위기에 처하게 한 구제역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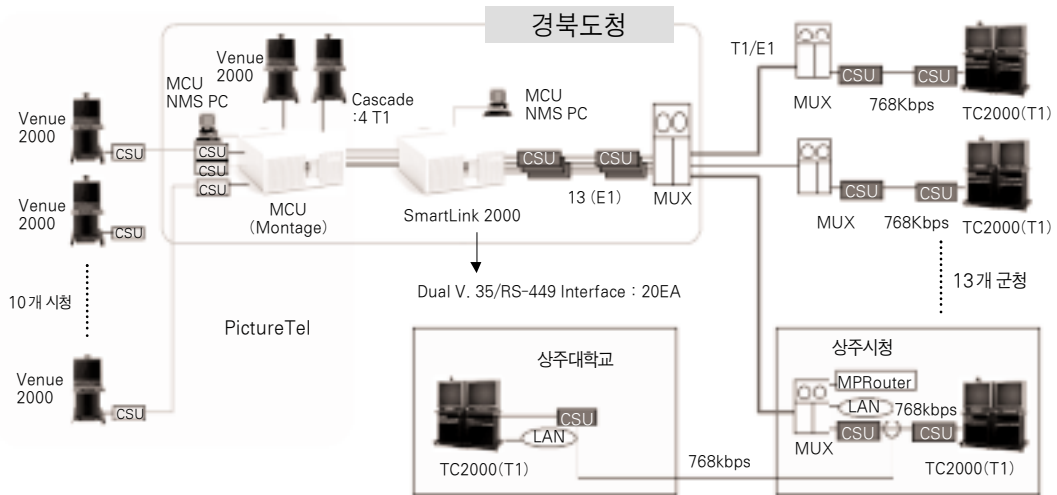


생시 구제역증상 진단 방법과 전염 예방을 위한 방제요령 교육 등을 긴급영상회의로 전달하였고,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울진으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긴급 대책지시 등 재해·재난의 위기상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일반회의시에 업무관련 간부나 직원 1~2명만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달받은 회의내용이나 지시사항을 업무담당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쳤으나 영상회의의 경우 과장·계장 등 간부공무원은 물론 시군이나 읍·면·동의 업무담당자에게까지 전원이 참석할 수 있어 상부기관의 업무추진 목적이나 지시사항을 최하부 기관 업무담당자에게까지 동시에 직접 전달함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였다.

특히 도내 대학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에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교수가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강의하던 것을 학교 영상회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어 강의를 위한 출장시간을 절감하여 교육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직접 강사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등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직접

〈그림〉 영상회의의 시스템 구성도



들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학업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행정 마인드 형성과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지방행정전화망’과 통합하여 회선 사용료 절감

한편 시범사업시 구축한 초고속국가망(T1 급)의 전용회선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 연간 회선사용료로 6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회선사용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전화망’의 여유회선(768Kbps)에 영상회의망을 통합하기로 하고 2개월간의 다양한 시험을 거쳐 통합운영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전용망을 해지하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

선사용료를 전액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영상회의시스템은 경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의 많은 인사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지방차원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국 3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동북아자치단체국제연합’ 회원간에도 영상을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구상중에 있다.

또한 홍수피해 등 재해·재난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헬기에 영상장비와 무선전송장치를 탑재하여 현장중계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의 학술세미나, 중소기업의 바이어 상담 등 민간이나 기업체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그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21세기의 세계는 대립과 반목보다는 상호협력을 추구하며, 국가이기주의보다는 공동번영을 우선해야 하는 시대이다. 국가와 민족 단위를 위주로 하는 폐쇄성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웃나라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그들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의 고통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구촌 이웃나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존공영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필자 註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국제사회의 개발정책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정부 혹은 정부산하 기관이 개도국에 대해 무상 혹은 저리차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이제 우리에게 시혜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이다. 마지못해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국가정책인 것이다.



박강호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필요성

공적개발원조의 대상국들이 되는 개도국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소중한 국제경제협력의 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8%(원유 98%, 천연가스 99%, 천연고무 100%)를 개도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우리나라 상품의 50% 이상을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99년 무역

흑자 243억달러 중 對개도국 흑자가 222억달러(91%)에 이른다. 개도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주요 전략인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이념의 이행을 위해서도 공적개발원조의 제공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권·빈곤·여성·환경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진·홍수 등과 같은 재난발생시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정이념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이러한 혜택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이나 첨단 기술의 이전 대신 개도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경험과 개도국들이 수용 가능한 중급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의 전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개발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선언하는 원조헌장(Aid Charter)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한다.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선진국·개도국간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노력한다.

둘째,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최빈국의 빈곤 감과 최빈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식량문제·누적채무문제·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지원한다.

셋째,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추구는 우리 정부의 기본이념이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가 국제평화,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국가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동참한다. 개도

공적개발원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국가정책이다. 공적개발원조의 대상인 개도국들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국이자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ODA	61.16	57.48	76.80	111.56	140.22	115.99	159.15	185.61	182.71
- 양자간원조	12.25	31.52	45.22	60.12	60.07	71.46	123.31	111.34	124.69
· 무상원조	3.26	25.04	30.99	32.68	38.45	50.11	53.41	54.77	37.21
· EDCF 차관	8.99	6.48	14.23	27.44	21.62	21.35	69.90	56.57	87.48
- 다자간원조	48.91	25.96	31.58	51.44	80.15	44.53	35.84	74.27	58.01
GNP(억달러)	2,518	2,920	3,057	3,308	3,780	4,526	4,804	4,374	3,168
ODA/GNP	0.024	0.020	0.025	0.034	0.037	0.026	0.033	0.042	0.058

국의 환경·빈곤·여성개발·보건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한다.

공적개발원조 현황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受援國에 직접적으로 원조를 공여하는 양자간 협력과 국제기구에의 출자, 분담금 등을 통하여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원조가 제공되는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간 협력은 다시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의 감독하에 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양자간 유상원조(EDCF)는 재정경제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집행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에는 對국제기구 분담금 납부형식의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IBRD, IDA,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는 87년 2,600만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8년에 총 1억8,300만달러 규모로 공적개발원조/GNP 비율은 0.058%이다. 이 중 양자간 협력 규모는 1억2,400만달러(무상원조 3,700만달러, EDCF 차관 8,700만달러)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규모는 5,800만달러이다.

지원분야별로는 교통·통신·에너지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며(8천만달러), 다음으로는 교육·보건 등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6천만달러)이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에 집중(84%)되어 있다. 98년 EDCF 차관, KOICA 무상협력 등 양자간 협력기금 주요 수원국은 인도네시아(1,900만달러), 중국(1,800만달러), 스리랑카(1,600만달러), 미얀마, 베트남 등이다.

공적개발원조의 과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수적이다.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과제는 규모의 증대, 질의 향상 그리고 참여형 개발원조의 강화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

98년 우리나라의 GNP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0.058%로서 선진 원조공여국들의 0.23%에

〈표 2〉 주요국의 ODA 규모 비교(98년)

(단위 : 달러, %)

	GNP	ODA	ODA/GNP비율	1인당 ODA 공여액
한 국	3,168억	1.83억	0.058	4
네덜란드	3,800억	30.4억	0.80	196
스 페 인	5,650억	13.8억	0.24	35
호 주	3,530억	9.6억	0.27	51
일 본	38,380억	106.0억	0.28	84
미 국	80,600억	87.9억	0.10	33
그 리 스	1,219억	1.95억	0.16	18

비해 미미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고, 우리 경제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그리스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보다도 작다. 이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

년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돈이 4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최소수준인 GNP의 0.1%를 공적개발

원조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52%만을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도국에 상환 부담이 없는 무상원조의 비중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98년 기준으로 선진 원조공여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의 79%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원조는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민·지방자치단체·NGO·민간기업 및 언론단체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원조 사업을 실시하는 참여형 국제개발원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개발원조의 의미·효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NGO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도국들에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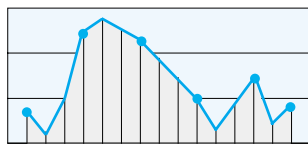
며, 진솔한 자세로 상호 이익에 기초한 진정한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원조는 자비와 동정이 아닌 개도국들이 지식과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디까지는 내 이웃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웃의 개념을 더 넓히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

의 기아·질병·전쟁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이 있을 경우 그들 자신이 우선 책임이 있지만, 이웃인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GNP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0.058%로 선진국의 0.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최저수준인 GNP의 0.1%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현재 52%에 불과한 무상원조의 비중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일본경제의 회복조짐과 향후 전망

이흥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1990년대초 발생한 버블 붕괴로 인해 만성적인 불황을 겪어 왔다. 장기불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일본 정부의 정책결정 지연, 일본식 기업경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논의되어 왔으나, 무엇보다도 地價 하락에 따른 주식시장의 붕괴(주가 폭락)와 경기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일본은 제로성장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81년~90년 연평균 4%대의 고성장을 기록).

반면 미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 정보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지속적인 주가 상승과 대량의 해외자본 유입을 시현하면서 최장기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경제의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어 왔으나, 신경계론에 입각한 미국경제의 활황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버블 이후,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일본적 가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동시에 일본 재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판단(재정구조개혁법 실시 및 소비세율 인상 등)과 행정구조(일본 대장성의 행정체제 등)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1998년 이후부터 경기회복 중심의 정책(지속적

인 재정지출 및 통화확대정책, 제로금리정책 그리고 금융시스템개혁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물론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급진적인 구조개혁은 일본인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상실 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과거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줌으로써 21세기에 어울리는 일본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고양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회복조짐 가시화로 성장의 발판 마련

버블이 붕괴된 이후 10년, 최근 일본경제는 점진적이거나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999회계연도(이하 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금융완화정책(제로금리정책) 그리고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3년만에 플러스 성장(0.5%)을 시현하였다. 2000년 1/4분기 역시 전기대비 2.4%(연율 10.0%)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3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표〉 참조).

과거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한 자본유출 현상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기업의 수익률 향상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일본 주식매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유입 현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주식시장 또한 해외투자자들의 활발한 일본주식 매입 등에 힘입어 닷케이 평균주가가 한 때 2만포인트대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불투명감을 해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경제의 회복조짐은 실물경제를 통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수요 부문의 개인소비(GDP의 60%)와 설비투자(GDP의 15%)가 회복세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표〉 참조).

1999년도 개인소비는 일본 정부가 전망한 1.6%보다는 밑돌았으나, 전년도대비 1.2%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 경기회복을 견인하였다. 설비투자 역시 1999년도 전체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나

일본경제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전후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희생을 동반하면서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피,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 부문의 회복세는 지금까지 수출에만 의존해 온 일본경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망치(-6.1%)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써 예상 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2000년 1/4분기에 들어서도 각각 전기대비 1.8%, 4.2% 증가함으로써, 회복기조가 정착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에 따른 정책효과로 시중은행의 신용도가 상당히 회복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형 시중은행이 기업집단을 초월한 인수·합병으로 세계적 규모의 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점도 일

〈표〉 최근 일본의 GDP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엔, %)

	1999회계연도		1999년				2000년 1/4
	명목	실질	1/4	2/4	3/4	4/4	
GDP 규모	493,818	482,351	482,863	487,498	482,619	475,829	486,091
GDP성장률 (연율)	-0.7 (-)	0.5 (-)	1.5 (6.3)	1.0 (3.9)	-1.0 (-3.9)	-1.6 (-6.4)	2.4 (10.0)
개인소비	0.5	1.2	0.9	1.1	-0.2	-1.6	1.8
설비투자	-4.8	-2.5	2.3	-2.1	-2.1	3.2	4.2
주택건설투자	5.0	5.6	1.4	12.9	-3.2	-5.8	6.6
공공투자사업	-3.2	-0.9	6.2	2.8	-8.5	-5.4	-7.5
수출	-2.8	5.9	0.0	1.5	5.0	0.7	5.4
수입	0.8	8.7	2.4	2.6	2.8	5.0	-0.6

註: 회계연도(당해년 4월~익년 3월)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본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경영개혁이 급속한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기업수익이 회복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 기업은 2000년 3월 결산에서 경상수익이 크게 호전되었는데, 이는 곧 고용·설비·채무 등 세가지의 과잉감이 해소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 계열간의 거래로 대표되는 일본식 경영과 결별하고 수익력과 경쟁력 향상, 주주이익 중시를 목표로 내걸고 구조조정 및 연쇄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산업이 새로운 성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물론 일본의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관련 투자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20% 수준이지만, 이는 산업계 전체의 기술혁신을 자극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나아가 기업의 합리화 및 비용절감 그리고 신속한 경영전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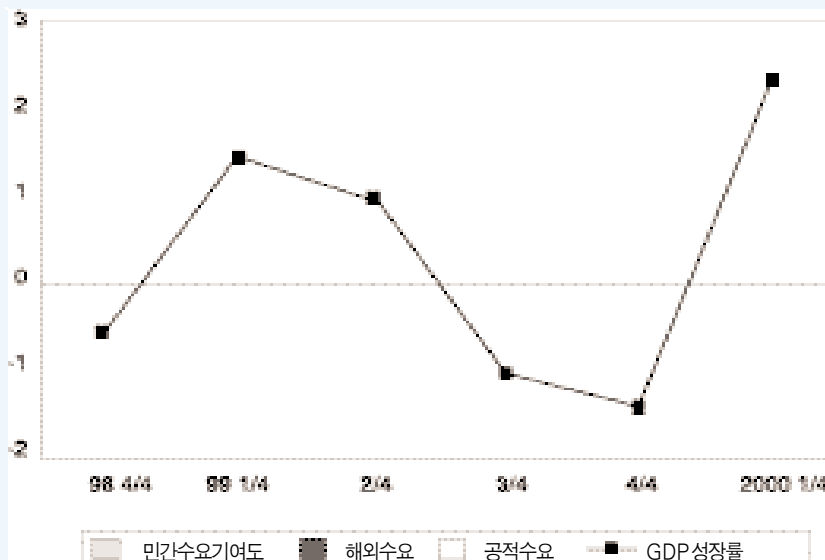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빠른 경제회복을 들 수 있다. 아직 금융불안 및 경제·사회의 불안정이 일부 남아 있으나, 한국과 태국 등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고 경제성장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아시아 국가가 높은 성장잠재력을 다시 나타내고 있어, 일본경제의 회복기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에 따른 경기회복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듯

이와 같이 일본경제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전후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희생을 동반하면서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피, 3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

〈그림〉 주요 수요항목의 기여도 추이



자료 : 일본 경제기획청

하였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 부문의 회복세는 지금까지 수출에만 의존해 온 일본경제에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복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2000년도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플러스(1~1.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의 수익 개선에 힘입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일본경제가 자율적 경기회복 궤도에 진입,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 2.5%대의 성장률을 시험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재정확대와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해온 데 비하면, 99년도 0.5%의 성장률 달성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적 경기회복 궤도 진입이 과제

더욱이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의 負의 유산으로 국가채무(GDP대비 129%) 및 재정적자(GDP 대비 13%대) 해소, 제로금리 해제시기,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및 고령화사회 이행에 따른 고용악화 등 많은 잠재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경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다. 더 이상의 재정적자 확대는 오히려 장기금리 상승을 야기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지금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정책대립보다는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는 정책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적극성과 신속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일본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정보기술 등 하이테크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토대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내수확대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경제의 감속(주가하락 등)과 달러화 약세 불안 등 많은 잠재 불안요인에 대비한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일본에서는 21세기 일본의 정치구도를 가늠할 중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나, 여야 각 당은 상호 비방과 격심한 정책대립으로 경제현안 해결보다는 정치기반 확립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다. 일본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야 각 당은 기존의 정책 즉, 재정지출과 세제 감세 등 일련의 정책보다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경제개혁의 비전을 내세워 경쟁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을 것이다.

지금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정책대립보다는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는 정책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적극성과 신속성이라 할 수 있다. ■